

의정활동보고서

제189회 임시회(2004. 5. 27 ~ 6. 10)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의근 도지사님과
도승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제189회 임시회가 열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성실하게 봉사해 오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번 경주에서 개최한 “영남권 5개시·도의회 의원세미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무처의 차질없는 행사준비로 시·도의회
상호간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교환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기대와 성원속에 출범한 제7대 도의회 전반기도 이제 한달을 남겨둔 채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고 있습니다.

지난 전반기 2년은 그 어느때 보다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조례안을 비롯한 197건의 안건 처리와 “FTA체결에 따른 지원대책” 등
여러 건의 건의안을 관계 요로에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데 앞장서 왔으며

특히, “고속철도 김천역사 설치 건의안”을 중앙정부가 수용하여 낙후된 도내 중·서부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게 됨은 큰 성과중의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매 회기마다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도정에 반영하는데도 적극 힘써 왔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모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라크 파병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주한 미군 감축계획에 따른 국가 안보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경제문제로 인해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의 지속적인 인상과 중국의 긴축정책은 소비와 투자부진으로 위축된 국내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금년도 국가 경제전망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날로 증가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이전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 경영자 50% 정도가 해외로 공장 이전을 원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내 중소기업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도정의 역점은 지역 경제살리기에 모아져야 할 것이고
의회와 집행부는 지혜를 모아 도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이번 회기에는 도정질문과 도청 및 교육청의 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하게 됩니다.

도정질문 의원님께서서는 도정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으로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시고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의는 불요불급한 경비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도민의 혈세가 한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제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가정에 늘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며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 5. 27

경상북도의회의장 崔 圓 炳

차 례

I. 개 황	9
II. 의사 일정	10
1. 소 집	10
2. 회 기	10
3. 활 동	11
가. 본회의	11
나. 위원회	12
III. 의안 처리	16
1. 본회의	16
2. 위원회	17
IV. 민원처리	18
1. 청 원	18
2. 진 정	18
가. 접 수	18
나. 처 리	19

V. 본회의 보고사항	20
1. 의안 접수사항	20
2. 조례공포 사항	20
3. 위원회 활동사항	21
4. 기타사항	21
VI. 도정질문	25
VII. 5분자유발언	71

부 록

<input type="checkbox"/> 조 례 안	85
<input type="checkbox"/> 예 산 안	105
<input type="checkbox"/> 동 의 안	110
<input type="checkbox"/> 기 타 안	118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189회 임시회는 2004년 5월 27일 개최하여 6월 10일까지 15일간의 회기동안 3차의 본회의와 연 15차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5월 27일(목)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89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004년도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005년도증기지방재정계획보고, 200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위촉기간연장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휴회의건, 도정질문(정보호, 김정기, 이원만 의원)을 한후 휴회하였다.

또한 5월 28일(금)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질문(김기대, 장대진, 김성하 의원)을 하고 휴회하였다.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경상북도 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한 안전심사를 실시 하였다.

6월 10일(목)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임원식, 한혜련, 채희영, 김성하 의원)을 청취한 후 상임위원회의원선임의건(장찬식 의원),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경주천군동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연장허가동의안, 2006학년도신설부지매입비지방채발행안,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 발의), 경상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의결하고 제189회 임시회를 폐회 하였다.

II. 의사 일정

1. 소 집

가. 집회 구분 : 임시회

나. 소집 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라. 집회공고일 : 2004. 5. 12

마. 집 회 일 : 2004. 5. 27(목) 11:00

2. 회 기

가. 회의 기간 : 2004. 5. 27 ~ 6. 10(15일간)

나. 개의 횟수

○ 본회의 : 3회(누계 52회)

○ 위원회

구분	계	의회 운영	기 획	행정 사회	교육 환경	농수산	산업 관광	건설 소방	특별
금회	15	2	1	3	2	1	1	1	4
누계	231	25	23	34	39	24	27	24	35

※ 누계는 제7대 의회 누계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4. 5. 27(목) 11:00	1. 제189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4. 200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5.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위촉기간연장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7. 휴회의건 8. 도정에관한질문 정보호 의원(구미시, 교육환경) 김정기 의원(김천시, 농 수 산) 이원만 의원(포항시, 산업관광)	제 1 차 원안가결 원안가결 "
5. 28(금) 11:00	1. 도정에관한질문 김기대 의원(성주군, 건설소방) 장대진 의원(안동시, 행정사회) 김성하 의원(경산시, 교육환경)	제 2 차
6. 10(목) 11:00	1.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경주천군동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연장허가동의안 6. 2006학년도신설학교부지매입비지방채발행안 7.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200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 200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제 3 차 원안가결 " " "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수정가결 " 원안가결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4. 5. 31(월) 10:00	○ 2004년도경상북도제1회추경예산안 - 의회사무처 소관	제 1 차 원안가결
6. 10(목) 10:00	○ 제190회제1차정례회회기협의의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견	제 2 차 원안가결 "

<기획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4. 5. 31(월) 11:00	○ 2004년도경상북도제1회추경예산안 -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 1 차 원안가결
6. 1~6. 2	○ 현지확인(안동, 영양) - 안동의료원 및 개발사업장	

<행정사회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4. 6. 1(화) 11:00	○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경주천군동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연장허가동의안 ○ 2004년도경상북도제1회추경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자연환경연수원 포함)	제 1 차 원안가결 " " " " 수정가결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6. 2(목) 11:00	○ 2004년도경상북도제1회추경예산안 - 경도대학,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제 2 차 원안가결
6. 10(목) 10:00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현준 의원의 51인) ○ 경상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 3 차 수정가결 원안가결

<교육환경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4. 5. 31(월) 11:00	○ 2006학년도신설학교부지매입비지방채발행안 ○ 2004년도경상북도제1회추경예산안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위원회, 직속기관, 지방교육청 소관	제 1 차 원안가결 수정가결
6. 1(화) 11:00	○ 2004년도경상북도제1회추경예산안 - 보건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 팔공산도립 공원관리사무소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 2 차 수정가결 원안가결

<농수산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4. 6. 1(화)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도경상북도제1회추경예산안 - 농업기술원 - 농수산국 소관 	제 1 차 원안가결 "

<산업관광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4. 6. 2(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도경상북도제1회추경예산안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경제통상실 소관 	제 1 차 원안가결 "

<건설소방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4. 5. 31(월)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도경상북도제1회추경예산안 - 건설도시국 소관 - 소방본부 소관 ○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1 차 원안가결 " 수정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4. 6. 3(목)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 -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 토론·의결 	제 16 차 수정가결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6. 4(금)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도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 - 경제통상실 소관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소방본부 소관 	제 17 차
6. 7(월)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도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국 소관 - 자치행정국 소관 - 건설도시국 소관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보건환경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제 18 차
6. 8(화)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도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 경도대학 소관 - 의회사무처 소관 ○ 2004년도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의결 	제 19 차 수정가결

Ⅲ. 의안 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의	심 의 · 의 결				철회	계류	비고
		계	가 결		부결			
			원안	수정				
계	13 (202)	13 (201)	9 (176)	4 (24)	(1)		(1)	
조 례 안	소계	6 (94)	6 (94)	4 (83)	2 (10)	(1)		
	의 회 제 안	2 (9)	2 (9)	1 (5)	1 (3)	(1)		
	도지사 제 출	4 (67)	4 (67)	3 (61)	1 (6)			
	교육감 제 출	(18)	(18)	(17)	(1)			
예산·결산	2 (19)	2 (19)	(8)	2 (11)				
동의·승인	2 (51)	2 (51)	2 (50)	(1)				
건의안	(7)	(7)	(6)	(1)				
결의안	(8)	(8)	(8)					
기 타 안	3 (23)	3 (22)	3 (21)	(1)			(1)	유보1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2. 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부결	철회	계류
		가 결									
		계	조례	예산 결산	동의 승인	건의	결의	기타			
계	13 (204)	13 (201)	6 (94)	2 (19)	2 (51)	(7)	(8)	3 (22)			(3)
의회운영	(5)	(5)	(4)				(1)				
기 획	(16)	(15)	(8)		(5)	(1)		(1)			(1)
행정사회	6 (58)	6 (57)	5 (39)		1 (16)	(1)	(1)				(1)
교육환경	1 (29)	1 (29)	(22)		1 (6)			(1)			
농 수 산	(12)	(12)	(4)		(7)	(1)					
산업관광	(27)	(27)	(13)		(13)		(1)				
건설소방	1 (10)	1 (10)	1 (3)		(4)	(2)		(1)			
특 별	2 (19)	2 (19)		2 (19)							
분회의	3 (28)	3 (27)	(1)			(2)	(5)	3 (19)			(1)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1		1	1	

※ 누계는 제7대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별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2 (77)	(5)	(9)	(9)	1 (16)	(6)	(4)	(8)	(8)	1 (12)
의회운영										
기 획	(2)									(2)
행정사회	(8)	(4)	(2)	(1)	(1)					
교육환경	1 (15)			(1)		(6)		1 (7)		1 (1)
농 수 산	(8)			(1)	(1)				(6)	
산업관광	(16)		(7)	(1)			(4)			(4)
건설소방	1 (25)	(1)		(5)	1 (14)			(1)	(2)	(2)
특별위원회	(3)									(3)

※ ()안은 제7대 의원 누계

나. 처 리

위원회별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이송	
계	4 (77)	4 (77)				
의회운영						
기 획	(2)	(2)				
행정사회	(8)	(8)				
교육환경	2 (15)	2 (15)				
농 수 산	(8)	(8)				
산업관광	1 (16)	1 (16)				
건설소방	1 (25)	1 (25)				
특별위원회	(3)	(3)				

※ ()안은 제7대 의회 누계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제 출 자 (제출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지사 (2004. 5. 17)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4. 5.19)
경상북도지사 (2004. 5. 17)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4. 5.19)
경상북도지사 (2004. 5. 17)	경주천군동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연장허가동의안	행정사회 (2004. 5.19)
경상북도지사 (2004. 5. 17)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소방 (2004. 5.19)
경상북도지사 (2004. 5. 17)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본회의 (2004. 5.19)
경상북도교육감 (2004. 5. 18)	2006학년도신설학교부지매입비지방채발행안	교육환경 (2004. 5.19)
경상북도교육감 (2004. 5. 18)	200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교육환경 (2004. 5.19)
경상북도지사 (2004. 5. 19)	200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 상임위 (2004. 5.19)

2. 조례 공포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4. 4. 2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2004. 5. 13
2004. 4. 2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2004. 5. 13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4. 4. 2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	2004. 5. 13
2004. 4. 2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입장료징수및 관리조례	2004. 5. 13
2004. 4. 29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2004. 5. 13

3. 위원회 활동사항

위원회명	내 용
건설소방	○ 공사 준공식 참석 · 일자 : 2004. 4. 30, 5. 14 · 대상 : 자인~진량간 도로 확·포장공사등 3개소
산업관광	○ 중국지역 관광홍보 · 기간 : 2004. 5. 17 ~ 5. 22 · 대상 : 중국 화남성등
교육환경	○ 산림과학박물관 개관식 참석 · 기간 : 2004. 5. 25(화). 14:00 · 장소 :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

4. 기타 사항

- 제19회 이북도민 경북연합회 정기총회
 - 일 시 : 2004. 4. 30(금). 11:30
 - 장 소 : 포항 청솔밭 웨딩홀
 - 참 석 : 정무용 부의장(축사)

○ 주민소송제 도입을 위한 대토론회

- 일 시 : 2004. 4. 30(금). 15:00
- 장 소 : 대구 전시컨벤션센터
- 참 석 : 김선중 부의장(토론)

○ 제11주년 노동절 기념행사

- 일 시 : 2004. 5. 1(토). 10:30
- 장 소 : 경주 서라벌 문화회관
- 참 석 : 최원병 의장(축사)

○ 2004 경상북도 부부배드민턴 대회

- 일 시 : 2004. 5. 1(토). 10:30
- 장 소 : 포항 체육관
- 참 석 : 정무웅 부의장(축사)

○ 영남권 5개시·도의회 의원세미나

- 일 시 : 2004. 5. 3(월). 10:00
- 장 소 : 경주 교육문화회관
- 참 석 : 도의원, 최원병 의장(인사)

○ 경상북도 수산업 경영인 대회

- 일 시 : 2004. 5. 7(금). 11:00
- 장 소 : 경주 양남면 원자력공원
- 참 석 : 정무웅 부의장, 이상효 의원

○ 제24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경상북도 선수단 결단식

- 일 시 : 2004. 5. 11(화). 09:00
- 장 소 : 도청 전정
- 참 석 : 김선중 부의장

-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식**
 - 일 시 : 2004. 5. 11(화). 11:0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최원병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 **제42회 도민체전 개회식**
 - 일 시 : 2004. 5. 11(화). 19:00
 - 장 소 : 경주 시민운동장
 - 참 석 : 최원병 의장(축사)

- **제3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
 - 일 시 : 2004. 5. 14(금). 14:30
 - 장 소 : 도청 강당
 - 참 석 : 김선중 부의장(축사)

- **제35차 경북지구 JC회원대회 개회식**
 - 일 시 : 2004. 5. 16(일). 14:00
 - 장 소 : 예천 양궁경기장
 - 참 석 : 최원병 의장(축사)

- **경상북도 교육청 제2회 한마음 체육대회**
 - 일 시 : 2004. 5. 16(일). 09:30
 - 장 소 : 구미 금오공고
 - 참 석 : 김선중 부의장(축사)

- **제3회 내연산 산행대회**
 - 일 시 : 2004. 5. 16(일). 10:00
 - 장 소 : 포항 내연산 일원
 - 참 석 : 정무용 부의장(축사)

○ 2004 경상북도 의정회 정기총회

- 일 시 : 2004. 5. 19(수). 11:00
- 장 소 : 대구 그랜드 호텔
- 참 석 : 정무용 부의장(축사)

○ 제7회 e-Learning박람회 개막식

- 일 시 : 204. 5. 20(목). 11:00
- 장 소 : 대구 전시컨벤션센터
- 참 석 : 김선종 부의장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 일 시 : 2004. 5. 20(목). 15:00
- 장 소 : 경남도의회 상황실
- 참 석 : 손규삼 의회운영위원장

○ 제9회 경북여성백일장 개최식

- 일 시 : 2004. 5. 25(화). 10:30
- 장 소 : 칠곡 경북과학대
- 참 석 : 권준택 의원

VI. 도정질문

□ 제1차 본회의

정보호 의원(교육환경위원회)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불철주야 전력을 다하고 계신 이의근 도지사님,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양성에 노심초사하시는 도승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15 총선의 결과는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는 곧 우리 경북이 변화에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변화를 창조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우리 경북에 있어서도 새로운 인식과 각오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관계공무원의 보다 높은 분발과 노력을 부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드리는 질문들은 우리 경북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이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들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유인물 순서대로 해야 하나 답변과정에서 집행부 직제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의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경북은 현재 이들 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경상북도는 지난 5월13일 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지원단에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 35개 공공기관유치제안서를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는 오는 7월 내지 8월 중으로 1차 이전대상기관이 결정될 계획으로 있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을 지역의 사활을 걸다시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이 되는 데다 심각한 취업난을 덜 수 있는 등 지역경제에 엄청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는 공공기관의 유치가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거의 모든 사활을 기울인다고 하면서도 본의원은 경상북도의 유치노력이 자칫 피상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교통부에 제안서를 제출한 지금에도 공공기관의 지역유치를 위한 전담팀 하나 없으며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도 뚜렷한 기본계획과 전략도 없이 무조건 많이 유치하겠다는 의욕만 앞세울 뿐이고 지역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한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도 한번 없었습니다.

둘째, 대구와 경북은 지리적 특성이 매우 유사한 만큼 대구와 경북의 전체적인 경제살리기를 위해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서 만큼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공기관의 지역이전을 위해 공동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상호 경쟁적으로 내 지역에만 오면 된다는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셋째, 공공기관유치와 관련하여 타 시·도와 유치경쟁을 벌이기도 전에 경상북도내의 시·군의 기초자치단체들간 과도한 경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상북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조정능력이 실종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과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이라도 행정부지사님을 단장으로 하는 유치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공기관의 지역 내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담팀은 공공기관의 이전뿐만 아니라 민간의 대기업과 각종 연구소 등의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지역 내 이전을 위해서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의 민간기업, 단체 등이 하나로 똘똘 뭉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바 지역민들의 의견수렴과 역량결집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와 사전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유치가 최종 결정되는 시기까지 우리 경상북도는 다른 자치단체와 치열한 경쟁을 할 것입니다. 이에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먼저 도내의 시·군들간 공공기관유치와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를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속철도 개통이후 지역 내의 교통연계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도부분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우리나라는 고속철도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고속철도의 개통은 국토 공간구조에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가령 지역간의, 도시간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어 인구 및 각종 시설입지가 공간적으로 분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인하여 기존 경부선 철도로 운행되는 열차가 크게 줄고 정차지 증설로 운행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어 고속철이 정차하지 않는 구미, 김천, 왜관, 포항 등의 중·소도시 주민들은 오히려 종전보다 더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고속철을 중심으로 한 경부선 위주의 철도노선 체계는 경북 내륙지역 철도를 이용하던 서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고속철도가 인구와 시설을 분산시킬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중·소도시의 인구는 오히려 고속철이 통과하는 대도시 인근으로 유출되는 결과를 나올 것이고 경북지역 중·소도시들의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지역내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구미지역의 경우만 하더라도 구미역에 정차하는 경부선 열차 운행 횟수는 고속철도 개통 전과 비교하여 새마을호는 21.4% 무궁화호는 43.2%나 감소되었으며, 통일호는 아예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속철도 김천, 구미권 역사가 제기능을 할 때까지 임시역사라도 조속히 건립하여 고속열차를 정차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속철도는 어디까지나 간선교통수단임으로 고속철도와 관련된 운송체계와 교통연계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되어야만 고속철도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고속철도의 정차역과 경북지역내의 주요도시를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경북지역의 주요지역을 연결하던 철도노선의 운행을 확대하여 경북의 주요지역을 순환할 수 있는 지역철도노선을 운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영주, 문경, 상주, 김천, 구미, 대구, 영천, 경주, 포항을 연결하여 하루에 한 두 차례라도 왕복 운행하도록 한다면 고속철도의 지역연계성을 높이고 동시에 지역내 분산의 정도를 높여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경북지역에는 경부선, 경북선, 중앙선, 대구선 등이 운행되고 있으나 모두 중단철도노선에 한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횡단철도 노선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경북의 동서를 연결할 수 있는 순환노선을 만들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즉, 새로 신설될 김천구미고속철도역사로부터 구미, 안동, 울진 혹은 구미, 의성, 영덕 노선을 새로이 개설하고 이를 다시

향후 개통될 포항 삼척간의 동해선과 연결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경북의 대부분의 지역을 철도로 연결할 수 있어 도민화합을 이끌어 내고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5일근무제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여가 및 관광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북아 경제중심권으로 가는데 있어 경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환태평양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철도인프라구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고속철도 개통과 관련하여 도내의 심야버스운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내의 경우 일선 시·군을 오가는 버스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밤 10시만 되면 승객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주요노선을 제외하고 전혀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내의 도민들은 밤이 되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이동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급하면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경비의 부담뿐만 아니라 야간운행의 위험도 많아 공영버스의 심야시간대 운행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경북도내 지역에 있어서 우선 야간 통행수요가 비교적 높은 지역에 심야버스 운행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기존에 대구와 경주~포항~울진구간 이외에도 구미, 김천, 상주, 안동, 영주 등 주요지역과 대구를 연결하는 동시에 구미~포항 등 주요 사·군간을 연결하는 심야버스 운행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하여 도내 고속철도의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산업종사자와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로 작용할 것인 바 심야노선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최근 중앙의 재정경제부 관계자 말을 빌리면 지역별로 특화된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특구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도시 건설을 연계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오는 12월경에 지역특구가 부분적으로 처음 지정될 전망이며, 전국 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재계도 우리 경제에 몰아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기업도시가 아직은 추진하기에 이르지 않는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는 기업도시라는 개념이 아직 법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 합의와 준비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향후 공론화와 법제화의 과정을 거쳐 조만간 현실화 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파주의 경우 LG그룹이, 충남아산의 경우 삼성그룹이 어떠한 형태로든 적극적으로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도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질 것을 대비하고 동시에 우리 경북의 주요지역이 국내의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가능성의 정도와 향후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북의 균형적인 발전 등을 위해서는 대기업위주의 기업도시 혹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건설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보다 충실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대대적인 유치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과 협의하여 중소기업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명상웰빙타운에 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웰빙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경상북도가 도민들의 각종 스트레스로 찌든 심신을 치료할 수 있도록 2008년까지 사업비 760억원 들여서 가칭 명상웰빙타운을 조성키로 한 것은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사업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도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고 2005년 초에는 부지를 매입한 뒤 2006년 7월부터 2년간 타운조성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버금가는 세계명상문화축제까지 유치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가칭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은 주5일 근무제 시행과 아울러 건강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부응하는 사업이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한낱 일시적인 바람에 불과 할 수도 있는 웰빙이란 것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이 사업이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총사업 760억원 중 민자 640억원을 유치한다고 하지만 요즘 같은 불황에 어느 누가 선뜻 투자하겠다고 나설 것이며, 설사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상환할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더욱이 민간부분 웰빙 관련 건강산업도 뚜렷한 사업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마당에 마치 뜬구름 잡는 식으로 '명상웰빙'이라는 용어가 과연 일반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먹혀 들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더욱이 총 사업비 760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계획을 금년도 2004년도 연초 업무보고에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고,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등도 한번 개최함이 없이 어느날 갑자기 덜컥 신문지상을 통해서 계획만 거창하게 발표하는 것은 도정이 과연 합리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심홍보성 위주로 흘러가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또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버금가는 '세계명상문화축제'까지 계획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며, 자칫 흐지부지 될 수 있는 그래서 혈세만 낭비할 가능성이 있는 이 사업을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관련 질문입니다만 제한된 질문 시간관계로 질문은 유인질문 내용을 회의록에 올려 주시고 그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기 의원(농수산위원회)

김선종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 발언대에 여러 차례 섰으나 도정질문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질문 내용이 변변치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도지사를 비롯한 답변하시는 집행부도 질문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더라도 도민이 이해를 잘 하도록 성의를 가지고 쉽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오늘 오랜만에 도정질문을 하다가 보니까 좀 많습니다. 일곱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경북과 대구의 재통합 문제입니다.

경북과 대구의 주민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80% 이상이 통합을 원하고 있는데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주도층은 이를 말로 어렵다고만 할 뿐 그 추진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도지사께선 어떤 견해십니까?

경상북도의 여론 형성의 구심지역이 없습니다. 구미입니까, 포항입니까, 아니면 울진입니까? 구심지가 없는 여론을 바탕으로 한 도정, 그것은 허황해 질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상북도의 행정이 과연 도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깔고 이루어졌나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때 도청을 이전한다고 용역을 하는 등 열기를 뽐더니 다시 통합론이 대두되면서 도청이전은 허사처럼 된 것입니다.

20여년간 분리생활을 해보니 이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도민과 대구시민이 감지한 결과라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민선3기 출범 당시 시·도간 협의를 통하여 시·도통합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최근까지도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는데, 그동안 대구시와의 통합을 위하여 도지사께선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사께서 지금 알고 계시는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경상북도가 우선 주민들에게 통

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주민투표를 통해 물어야 하고 통합쪽으로 결론이 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대구시민의 주민투표를 실시토록 여론을 환기시키고, 만약 경북에서 부결되면 통합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도청이전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여론의 50%이상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을 통과시켰다가 엄청난 역풍을 맞는 것을 본 일이 있기 때문에 80%이상 갈망하고 있는 통합을 경북주민이 투표로 결정하면 대구시도 그냥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통합에 따른 부작용 문제는 주민투표로 통합의 원칙을 정해놓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조정차원에서 어느 쪽도 불이익이 없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토록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구시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통합 불가론을 말하며 경상북도는 사라질 단체라고 했다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 통합과 도청이전, 그 어느 것도 결정짓지 못하시고 임기를 마치시면 지금까지 도민들에게 심어진 좋은 이미지가 그때는 변할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 지방분산 배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정보보호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그 중에서 공공기관들이 경상북도에서 선호되는 지역은 주로 어느 지역인가 하는 것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6공이래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소위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이라 하여 42조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하였으나 농촌은 빛만 늘고 사람은 떠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참담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는 우연인지 필연인지 확실치는 않으나 민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시·도와 시·군을 이끌면서 더욱 심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들이 선거에는 선수급이나 농정과 농민과 농업과 농촌에 대하여는 무지와 무관심에 기인하여 그 기초행정과 중간행정에서 개방화시대를 대비하지 못한 탓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

습니다.

특히 각급 단체별로 경제적 개념 없이 축제와 문화행사에만 열을 내다 보니 자연 대중적 인기를 갖지 못하는 농정은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도가 하는 경주문화엑스포라 하겠는데 경상북도가 자체사업예산과 행정력을 문화엑스포만큼 농정에 쏟아 부었다면 우리 경북의 농민들은 정책의 성패를 떠나 도정에 대하여 고마움이라도 느꼈을 것입니다. 희망적이고 합리적인 농정으로 환골탈태의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좀더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도에서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기계, 농약, 비료, 종묘, 농자재 등을 보조 공급하여 왔는데 본의원은 농수산분과위원회에서 문제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도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농민들에게 공급되는 농약살포시 착용하는 방제복 한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합성수지로 된 운동복 같은 것을 한 벌에 4만 500원씩 각 시군별로 조달청에 단독 등록된 H실업으로부터 구입하였는데 경상북도가 2003년에만 총 5만5,000벌, 금액으로 치면 23억원어치를 구입하여 농가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농민들은 공짜니까 가격은 관심이 없다가 값을 알고는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4만500원씩 5만5,000벌을 한 업자로부터 산다면 모직양복을 한 벌씩 살 수 있을 것이라고들 하면서 믿지를 않는 실정입니다. H실업, 이것은 알파벳 H입니다, 여기서는 보조금 붙은 인력절감 방제기를 농가에 판매하고 있는데 농민들이나 농기계 장사들이 하는 말이 관급 아니면 아무도 사지 않을 비싼 가격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더구나 성능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회사 제품이 모두 어처구니없이 비싼 가격에 납품된 데 대하여, 또 농민들에게 보조가 붙은 채로 판매된 데 대하여 농민들은 여러 가지 상상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기질 퇴비, 종묘, 농약 등을 대량 구매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용 물자들이 구매는 대량으로 하면서 가격은 날개 소매가격으로 구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크게 보면 도정의 경영개념의 문제이고 그 다음은 농정

의 무관심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비단 농정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원가 개념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농촌에 119조원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만 현재와 같이 농정예산을 생산자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소모위주로 집행하면 농민은 보다 많은 부채를 떠 안고 모두 농촌을 떠나갈 것입니다. 빈 돈자루를 뒤집어쓰고서 말입니다. 개선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경상북도의 농정을 보면 각종 사업소, 연구소, 시험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여타 시·도보다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로도 볼 수 있으나 본의원이 지난 2년간 보아온 것으로는 실망스러움뿐입니다.

북부지역의 모 시험장은 연간 예산은 약 4억 가량 쓰면서 10년 동안 '산마' 연구를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연구실적이 제자리이고, 동부의 축산관계 시험장 역시 마찬가지로 그 위치한 지역에 가축질병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북부의 모 사업장은 예산 12억 쓰고 제작년에 5,000만원 수입올리고, 이 수입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나니까 작년에 1억1,000만원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경북바이오산업설치운영조례 심의하면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간판달기라는 말을 한바 있습니다. 간판은 많이 달아냈는데 문제는 내용이 없고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보는데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경주문화엑스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주문화엑스포란 말만 꺼내면 또 그 이야기하나 싶어 아예 귀를 닫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지난 번 조사특위발의 제안설명 등 여러 차례 발언을 통해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이 경주문화엑스포는 도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들어간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원리상 도민의 대표인 경상북도의회에서 반드시 정기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여야 한다는 소신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300만 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재단법인 경주문화엑스포에 대하여 경상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문화엑스포가 민법에 의해 설립되었건 상법에 의해 설립되었건 중앙부처가. 설립을 허가하고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했을 경우에 동 법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및 4항에 의거하여 지방공사·공단 외의 출자·출연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출연한 법인에 해당하면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에도 감사 및 조사를 거부함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를 하지 못함은 물론 의회를 기만하고 의도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드릴 말씀은 '96년 법인설립 시 자본금 1억원은 전액 도비이고 현재 출연금 103억2,000만원 중 국고 50억으로 48.5%, 도비 20억2,000만원으로 27.3%, 시비 25억으로 24.2%로 도비가 4분의 1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명시된 법조문을 애매하게 해석하고 계속 의회감사를 거부하면 도민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엑스포를 의심스럽고 쓸데없다는 그런 눈초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덕적인 타격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진정 존중한다면 법리논쟁 이전에 자진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도리인 줄 압니다. 그런다고 해서 법령을 훼손하거나 위배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데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엑스포에 대하여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수용한다면 본 의원과 서른 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 상정하여 본회의에서 유보계류중인 조사권 발의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도산하 지방공기업 등의 임원과 장의 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상북도의 경영은 지극히 관료주의경영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의 타파가 경북을 다시 진취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됩니다. 미국이 월남전에서 사실상 패배한 이후 한 때 경제력이 일본에 뒤진 적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인은 물질과 공권력이면 뭐든 다 되는 걸로 알다가 월남전에서 패배하자 깊은 실의와 좌절의 늪으로 빠져든 것입니다.

탁상공론으로 세운 예산을 효과성이나 효율성은 따지지 않고 소모시키는 형태로 집행하다보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정예산 집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 등장한 것이 레이건이라는 영화배우출신 대통령인데 그는 신경제 정책 즉 유명한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정책을 1981년에 발표하고 세금을 인하하여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기를 부양하여 경제를 활성화하였던 것입니다.

정부공기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면서 경직되어 있는 관료사회를 유연하게 하고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중시토록 하였습니다. 이른 바 신공공관리개념으로 행정을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그동안의 예산운용방식과 다른 형태로 변모하면서 미국사회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든 것입니다.

경상북도의 산하 법인단체의 장은 모두 다 퇴직관료가 맡고 있습니다. 도립경도대학도 학교경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경찰청장출신이 학장이며 국학진흥원은 전직 도지사이고 경북개발공사 등등 부지사나 국장 퇴직하면 산하 공기업단체의 장으로 보내는데 이는 신공공관리개념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도의 고급관료들에게는 좋은 일일지 모르나 이 시대와 도민의 뜻과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업무성격에 맞는 적절한 인재를 공모하여 배치하는 게 타당한 것 아닙니까? 거시정책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직지사 입구 검문소는 이전을 하든가 철거토록 해야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국민관광지 주변에 그것도 입구에 경찰검문소를 설치해놓고 관광분위기 깨는 곳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는 직지사 진입 삼거리에 가면 볼 수 있는 풍경인데 이것도 타도나 다른 나라에 없는 구경거리로 놔두는 것인지 경상북도 관광진흥정책의 부실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치안이 어느 곳보다 불안한 지역이어서 인지 앞으로도 관광객을 검문하는 불편을 주면서라도 구경거리로 방치해둘 것인지 도지사의 소견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난시청지역 해소문제입니다.

지난 대선이나 총선전의 방송사들의 행태를 보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대부분의 도민들은 많은 생각을 하셨으리라 여깁니다. 과연 시청료를 내야만 하는가를 고민한 분들도 많았던 걸로 압니다.

편파든 공정이든 부담이 적고 화면이 깨끗한 방송을 보고싶어도 그렇지 못한 난시청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케이블이 설치되지 않아서 비싼 위성수신안테나를 설치해서 시청하는 도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난시청지역은 몇 가구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방송사의 송출전파의 미약으로 화질이 좋지못하는 시청을 하고 수신료만 물고 있는 오지벽지의 도민은 몇 가구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차제에 오지 벽지에 있는 난시청 도민을 위하여 도비로 유선방송케이블을 깔아주는 등 중앙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최소한의 시청료를 부담해 줄 계획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질문은 소관업무는 아닐지 모르나 도민의 삶의 질과 연관되기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만 의원(산업관광위원회)

김선중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준비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을 위해서 기다려주신 이의근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은 농정부분과 그 다음에 기부금 관련 질문과 피드백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농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농업규모는 농업인 인구 56만명, 도민의 16% 전국 1위입니다. 경지면적도 29만ha로 논인 경우 전국 4위, 밭의 경우는 전국 1위, 또 많은 작물 그리고 축산부분에서도 전국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를 볼 때 그야말로 우리 도는 농도라 할 수 있으며, 지사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농도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농업이 그러하듯이 경북 농업 또한 서산에 해지듯 마지막 마지노선을 넘으려 합니다.

한·칠레 FTA 발효는 우리 경상북도 사과, 포도, 자두 등의 과실류와 돼지고기를 포함한 축산 등 농업 전반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 자명할 뿐만 아니라 쌀 재협상이 물고 올 파장은 가히 가늠키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 이후에 경북 농업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지사께서는 상상이나 해보셨는지 아니면 세월만 보내 보자는 식의 자포자기는 하고 있지 않으신지 그렇지 않다면 진정 고민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 것인지, 본의원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써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도의 모든 농업인들이 이런 질문을 지사께 하고 싶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제안 및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우리도 농업의 실상은 이제는 영양제를 복용하고 보약을 먹을 단계가 아니라 응급실에 앰블런스를 타고 입원해서 의사의 정확한 진단

하에 고단위 항생제 처방을 할 단계라는 판단 아래서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우리도의 고유한 색깔의 농정의 틀과 방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을 합니다. 지사께서 우리 도에는 11개의 특화시험장 및 사업장이 있다는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농정의 색깔의 일부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죄송하게도 본의원은 그 이야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심하게 이야기해서 효율 측면에서 볼 때 껍데기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장에서 하는 사업들이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시험장에서 개발한 기술들은 개인사업자가 이미 농업인들에게 전수한 기술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며, 연구인력과 연구환경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며, 연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등 연구환경의 개선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정부때 농업 구조 조정을 위해 42조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그 이후 농업인의 부채는 증가하였으며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 정부의 농정만 있고 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일률적인 투자의 형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의 농정은 중앙정부의 농정을 시·군에 분배하는데만 충실했다고 평가한다면 너무 가혹한 평가라 하겠습니까? 본의원이 반문해 봅니다. 효율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하드웨어만 확대한 결과 구조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돌이킬 수 없는 부채로 남아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어디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할지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농업인과 농업관련 공직자를 진정한 프로 농업인으로 즉 돈을 버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농업관련 자료를 받아보니 생산량 사과 23만 1,000 톤, 전국 1위, 포도 16만2,000톤 전국 1위 등 생산량 위주의 통계가 많습니다. 왜, 돈을 얼마나 벌어서 어떤 복지, 문화혜택의 생활수준으로 살

고 있다는 통계는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생산량 1위를 자랑삼아 이야기 하는 우리도의 농정이 전근대적이고도 벌써 폐기해야 할 생산량 증대에 시각을 고정시켜 놓은 결과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몇 년 전 젊은 농업인 40여명과 함께 인근 일본의 농업현장을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 포도 농장을 둘러서 견학을 한 농업인 모두가 “배울 것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농사지으면 망한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우리의 농업인들은 단위면적당 얼마의 생산량을 내느냐에 익숙해져 있으며, 일본의 농업인들은 단위 면적당 얼마나 돈을 버느냐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결과라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농업인들은 철저한 프로 농업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영천의 포도 값이 풍년일 경우 1Box당 5,000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의 포도는 당도 18BLX 이상 1송이의 무게가 300g 정도의 규격을 만들어 행정의 엄격하게 인증한 후 1Box당 150,000원 정도 받고 있는 것에 본의원은 놀랐을 뿐입니다. 본의원이 양돈업을 경영합니다만 우리나라 사료회사에서 자사 사료를 광고할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시키느냐의 경쟁인 반면, 일본의 사료회사는 얼마나 육질을 좋게 하느냐의 경쟁입니다. 성장이 빠르면 육질은 나빠진다는 것은 당연한 진리인 것입니다.

사과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을 만날 때마다 본의원은 별을 보지 못해서 불량 색깔과 저당도인 사과는 과감히 도태를 시킵십시오. 그러면 생산량은 줄지만 오히려 소득은 늘어날 것이라고 권유하지만 그렇게 실천하는 농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 도에서는 오히려 동조하고 부추긴 측면은 없는지 되돌아 봐야합니다. 과감하게 관행에서 탈피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또한 농업인의 의식 개혁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세번째, 농업의 문제는 농업인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농업인, 소비자, 정부, 자치단체, 교육청, 언론 등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만들 때만이 농업인의 농업문제는 해결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학교급식에서 최저단가 입찰을 고집할 때 그리고 다소비업체인

회사급식에서 질은 무시하고 최저가를 선호할 때 우리농업이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인 고급화는 요원할 것입니다. 생산을 해 봐야 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포스코 등 우리도 소재 대기업 대부분이 수입품, 저가품을 급식품으로 구입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때 우리 농업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지사께. 제안과 질문을 합니다. 올해 지사께서는 직접 나서서 외국 기업을 유치한 결과 큰 성과를 올리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지사께서 농업 부문도 팔 견고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올해를 경북 농업살리기 원년으로 선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정부문을 과감히 철저한 효율성 재고차원에서 개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또한 민간인의 특채로 농정조직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의향은 없으신지, 하드웨어를 전면적으로 조사한 후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여서 접목할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도 공인 농산물 인증제도를 확대해서 인증된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도가 팔 견고 고객과 소비자를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겨울 영농 교육시 현재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이 아니라 철저한 프로농업인 만들기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돈 많이 버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시적인 기구라도 특단의 우리도 농업 회생 비상대책 기구를 창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드백 시스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외래어를 사용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기초단체 의회에서 광역단체의 폐지건의안을 상정한 적이 있습니다.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간섭만하고 별 역할을 안 한다는 것이 그 주요 이유였습니다. 광역단체는 많은 역할이 있겠습니다만 그중 중요한 것이 기초단체간 조정과 조절의 역할과 기초단체와 중앙 정부와의 연결의 역할일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이 되고 있는지, 개선해야 될 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중앙 정부에 적극적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전달하여

서 빠른 속도로 개선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문민정부시절 42조의 농업투자에 빠른 피드백이 있었다면 또한 그리고 농기계 반값 공급 같은 정책도 문제점만 개선했다면 농업인의 이와 같은 과도한 부채는 없지 않았겠느냐라고 본 의원은 반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도의 시스템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들 피드백 시스템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런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각 과마다 개별적인 주문을 하여야 하고, 각 과마다 개별적인 답변이 있었으며 그 성과는 미미하였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에는 결과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를 지정해서 효율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께 묻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에 대한 준조세격인 기부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의 경주문화엑스포 개최 때 의원님들 앞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별첨 유인물과 같이 대구은행 6억, 삼성전자 4억, 농협 3억, 포스코 3억원 등 합계 26억8,200만원의 기부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후원사업 또는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금모집규제법 제2조에 기부금의 정의에서 명칭여하를 막론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기부금이라 하였습니다. 엑스포 후원금은 반대급부를 전제로 하였으므로 기부금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후원금액에 상응할 만큼 충분하고 또한 후원사 간에도 형평에 맞는 반대급부를 주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반대급부가 없었다면 그 주장의 정당성과 법적요건에는 흠결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럴 경우 강요성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은행은 입장권 판매대행으로 얼마나 수익을 올렸는지, 농협은 매장 부지 30평 제공에 3억원, 현대호텔에는 식당 40평 제공에 1억4,500만원의 형평의 논리는 무엇인지, 각 기업체 후원금 산정기준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은 도 금고업체이며 후원사 관련업체 대부분이 우리도와 업무상 연관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포스코의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감독권은 우리도의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포항시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왜 그때까지 우리도에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포항 어민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제4투기장 연장허가는 어민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한 후에 처리하였는지, 이와 같이 업무상 연관 있는 업체에 대해 후원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도민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와 마찬가지로 기초단체에서도 여러 명목으로 기부금을 받았 습니다.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감사한 적이 있는지, 또한 감사한 적이 있다면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기업 유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에 소재하는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원활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을 받는 것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의 일면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기부금이 아니라 후원사 지정에 의한 정당한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후원사 모집 시에 경쟁입찰 등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서서히 기온이 높아지고 습도 또한 높아지는 계절이 다가오자 학교의 집단식중독 기사가 언론매체에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며칠 전 모일간지에는 식중독환자 74%가 학생이며, 위탁급식학교가 직영운영하는 곳보다 8.4배가 식중독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본 의원이 학교급식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결과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포항지역의 납품업자 수명이 사법처리된 후에 포항

지역에 국한된 사항입니다마는 많은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의 지역은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며, 포항지역의 일부 학교도 ‘웃기는 이야기다,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관행대로 학교급식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중 유독 도 교육청 업무소관인 고등학교의 대부분이 출처 불분명한 급식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특히 사립학교 대부분은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온 세상이 모두 다 걱정하는 부분이 왜 학교에서는 개선되고 있지 않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식중독의 원인 대부분이 변질된 육류에 의한 것이며, 육류는 항생제 사용 정도, 지난 해 맹위를 떨쳤던 일명 조류독감 등 바이러스감염 등의 엄격한 품질관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유통과정 등의 감염, 급식사고시에 책임소재 규명 등을 고려해서 진공포장으로 유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림부 인증 HACCP, 즉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획득한 축산물을 사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선배의원님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지사님의 의지를 묻는 질문이 참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많은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제2차 본회의

김기대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존경하는 정무용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님.

세월이 과거에는 유수와 같다고 했는데 이제 바람같이, 총알같이 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7대 도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전반기가 다 끝나갑니다. 의정활동하시라 지역구 관리하시라 집행부 감시 감독 견제하시라 그동안에 많은 공을 세우셨습니다. 저도 곁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집행부 역시 과거의 무사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조금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살핀다고 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한 점이 군데군데에서 발생이 되어서 이것 또한 한편으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일쇼크다, 미 제2사단 철수다, 환율인상이다, 중국의 경제 하향조정이다, 중시하락이다,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특히 국방부의 발표에 의하면 금강산 관광수입이 북한에서는 대남공작 자금으로 쓰고 있다 하는 것을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칸 박사는 북한이 많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전직 육사 교장이 세 분의 대통령에 불만을 품으면서 유서를 남기고는 자살했습니다.

삼십만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점심시간에는 겨우 학교에서 밥을 먹는데 아침저녁으로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친다는 그저께 조선일보 톱기사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고등학생 10명 중에 8명이 취업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노라고 한탄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이렇게 사회 구석, 군데군데 국민의 한숨소리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은 4% 수매가 하락 소리를 듣고 가슴이 저리고 졸도할 지경입니다.

이런 데도 중앙정부의 지도자라든지 관료들은 '경제 걱정할 것 없다' 이

렇게 국민을 속이는 발언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개혁, 개혁' 하면서 3,000명 이상 공무원을 증원시킨다 하고, 자치단체장 인사권에 하급직원이 반발을 해서 사직당국에 고발도 하고, 이 사회가, 이 직장이, 이 조직이, 이 도민이 누구를 믿고 살아 가려는지 참 걱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하시면서 그 난중에도 지역을 살피시고 의정활동을 잘 살피셨습니다. 모두 발언을 마치고 이제 본론에 도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독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천의 정의원님이 상세하게 말씀드렸는데 답이 좀 미온적이고 우회적이라서 재삼 묻습니다.

역사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주 성 자체도 그렇거니와 인간성이 고약한 나라입니다. 6년간의 임진왜란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선조 25년, 1590년 지금부터 414년1개월14일 전에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소서행장이 제일 먼저 전라도 보성 땅에 상륙을 해서 우리나라를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괴롭힌 나라가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수상을 비롯해서 모든 장관, 모든 의회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면에 중앙정부가 신한·일어업협정을 하면서, 이것이 '98년11월28일 일본 가고시마에서 했습니다. 홍순영 씨라고 하는 장관이 독도 근처 해안에 고기 많이 잡히는 구역을, 회의를 하면서 일본에 넘겨줬습니다. 순종, 고종 때 이완용 씨라고 하는 사람은 36년 동안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일본에 넘겨주는 도장을 찍었지만 그 나라 등기는 이전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홍순영 씨라고 하는 외교통상부 장관은 일본에 건너가서 협상을 하면서, 하루종일 호텔에서 기다리다가 그 이튿날 만나러가니 일본에는 어느 지역에 고기가 뭐가 잡힌다, 무슨 어선이 출입했다, 몇 톤을 잡았다, 또 값은 얼마다, 세금은 얼마 매겼다고 일목요연하게 서류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외교통상부나 해양수산부는 주먹구구식인 거라요. 자료가 하나 있습니까, 전부 탈세를 염두에 뒀죠, 뭐가 뭔지 모르죠, 일본에서 찍자고 하는 대로 도장을 찍어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6년 전에. 전 어민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분은 이완용 씨보다도 더 나쁜 분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낱짜를 지연시켜야 될 것인데 왜 도장을 찍었습니까? 독도를 중간수역에다가 묶어놨습니다. 중간수역에다가 일본에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거기 도장을 찍었습니다. 중간수역이 뭐고, 배타적경제수역이 뭐니까? 독도는 우리 땅도 아니고 너저 땅도 아니고 중간 땅이다, 여기에 고기를 잡을 때는 양 나라가 의논을 해서 잡아야 된다, 그러면 배타적경제수역 지역이니까 우리 땅도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에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독도에서 200해리 밖에다가 도장을 찍었으면 독도에서 멀리 나갔을 것인데 울릉도 도동을 기점으로 해서 200해리 안에 도장을 찍으니까 독도가 그 중간수역에 들어갈 수밖에요.

이래 놔 놓고 지금은 꿀 먹은 벙어리 같이 해서 일본에서 들고 일어나면 그저 우리 땅인데 가만있어도 될 것인데 우리가 흥분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가만있으면 우리 땅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 당시에, '98년11월28일날 서명을 해서 '99년1월6일날 국회 비준을 해서 '99년1월22일날 발효했는 그 당시의 국회의원, 장관, 그 당시의 외교통상부에 근무한 직원들은 이완용 씨 못지 않은 국가에 해당행위를 했으니, 경상북도민의 영토인 우리 독도를 생각하면 가슴 아픕니다.

우리 경상북도지사는, 중앙정부는 식견이 좁아서 그렇게 했지만 우리 경상북도는 독도를 우리 땅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묻는 요점입니다.

아니, 3층에 건설위원회에 가서 붓글씨 써 놓은 것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오노? 이렇다니까, 공무원은. 뭘 시키면 들은 척 만 척 하고 말이지...

그래서 일본에는 제가 자료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의원에서 '93년도부터 '99년까지 총 7년간 중의원에서 독도에 대해서 75회 회의를 했습니다. 참의원은 53회 회의를 했습니다. 시네마현에서는 총 23회 회의를 했습니다. 죽도가 자기나라 땅이라고, 독도가. 그리고는 이 독도에다가 광권까지 발동을 해서 채광까지 하도록 일본에서 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럼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공무원이 시마네현을 169명이 5년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상북도지사 이하 공무원은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요, 경상북도의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해 놓은 것이 뭐 있느냐라는 것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독도, 그냥 우리 경상북도 행정구역이고 울릉도 구역 아니가?' 그것이 다인지 몇년몇월며칠에 누가 독도에 들어가서 누가 일본에 가서, 독도에 대한 소상한 기록을 밝히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도에, 우리가 임란이 일어나기 전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합쳐서 6년간 우리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때 선조 25년에 우리 조선에서는 정사에 우송당 장수 황씨로 계시는 황윤길 선생이 통신사 정사로 가시고 안동 내앞에서 태생하신 의성 김씨 학봉 김성일 선생이 부사로 왔습니다. 그때 갔을 때 일본 이토오히로부미하고 협상을 하라고 보냈는데 다녀와서 정사로 왔는 우송당 황윤길 선생은, 서인이었습니다. 동인은 학봉 김성일이었습니다. 이토오히로부미 눈이 독수리 눈과 같이 생겼기 때문에 곧 쳐들어올 것 같다, 아주 못되게 생겼다고 얘기하고, 학봉 김성일 선생은 쥐새끼 눈같이 생겼는데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공무원 169명이 시마네현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현수막에다가 죽도, 독도는 우리 시마네현 땅이라고 현수막을 쳐놨을 때 그 밑으로 지나갔을 거라 말이라고요. 그럼 거기 시마네현에 가서 무엇을 항의했는지, 이것을 밝혀주길... 그저 여행 잘하고 의원들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교육 잘 받고 일본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배워왔는지, 왜 시마네현이 우리

땅 독도를 당신들 땅이라고 하나, 이것을 수정해라, 고쳐라, 기록을 바꾸라고 항의했는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지사께서는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 가서 붓글씨 써 놓은 가져오라고 했는데... 두 번 보내도 안 가져오네...

우리가, 세 번째는 독도를 경상북도의 영토뿐만 아니라 신라 지증왕 때부터 우리의 관할권이니, 독도에 들어가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제가 6대 때 내무위원장 할 때 독도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집행부 고급공무원이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안 들어가면 좋겠다, 들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상부기관의 눈치본다고, “이것 무슨 소리하노? 거기 울릉도 행정선 못 탄다, 거기 해양경비선을 내놔라”, 우리가 갔습니다.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타임캡슐도 묻고 거기에 천지신명에게 고유도 했습니다. 고유문이 인쇄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의 도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이름 다 새겨놓고 물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왔습니다.

도의회는 이렇게라도 하니 어민들이 이것마저 우리가 못했더라면, 예, 죄송합니다. ...('是'자를 들어보이면서)... 이것 아십니까? 무슨 자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을을 시'자입니다. '을을 시'자, 이것 '을을 시'자입니다. 시시 비비 가릴 때 을게 가린다, 그래서 일본에 이토오히로부미를 만나러 갔더니 이것을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414년1개월14일 전에, 이것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학봉, 역시 안동이 선비고을이고 선비출신은 달라요, 학봉 김성일 선생이 저 글자를 떼라, 떼지 않으면 나는 오늘 협상 못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무슨 자입니까? 이것이 '날 일(日)'자입니다. 이것이 일본을 말하는 겁니다. 밑에 '아래 하(下)'자입니다. 밑에 '사람 인(人)'자입니다. 세 개의 글씨가 합해져서 '을을 시(是)'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일본의 하수인, 아랫것들이 우리를 만나러 오는구나, 우리는 을게 일하는데 너저가 왜 왔나 하는 식으로, 대구시장이 경상북도민을 비하하듯이 비하하는 발언을 했

습니다. 때라, 때면 가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토오히로부터가 이 현수막을 떼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경상북도 공무원은 시마네현에 갔을 때 저 현수막을 때라, 저것 떼지 않으면 내 시마네현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었나 이 말이라요. 그저 정년 잘 채기고 구경 잘 하다가 하면 되지 내가 뭐 별나게 이야기할 필요 있나, 이래저래 넘어가지, 이렇게 하지 않았겠나 싶어서 학봉 김성일 선생같이 경상북도 공무원이 선비정신을 발휘 했냐는 것을 내가 묻습니다.

그래서, 제2의 독도를 제주도 좋고 어디도 좋고 하나 만들자는 것입니다, 축소해서라도. 그래서 세계적인 관광객이 거기 오면 독도의 야생화, 야생초도 보고 그 주위에 나는 고기도 보고 거기에 날아다니는 갈매기도 보고 조형을 해서 아, 독도가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이걸 대한민국 땅이구나 라는 걸 홍보를 하자는 겁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는 홍보가 게임이 안 됩니다.

일본에는 만국제판소 국제재판소지요. 반드시 이것이 UN에 의해서 재판소에 상정될 줄 알고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독도에 대한 자료를 주도면밀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총무과에 전화해서 독도에 대한 책을 좀 가져오너라 하니까 아직 책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독도에 관한 책이 경북에 몇 권 있는지 가져오라고 하니까 아직 안 가져오는데 이렇게 해서 경상북도 적은 예산을 절약해서 경주나 어디든 간에 독도의 동도가 서도같은 그런 모형을 만들어서 역사관도 좋고 박물관도 좋고 자료관도 좋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국제사회에 홍보를 해서 독도를 뺏기지 말자는 겁니다.

번 훗날에 우리가 이 세상에 없을 때 독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대마도도 우리나라 땅인데 일본한테 뺏기지 않았습니까? 고려 때부터 대마도는 우리나라 땅입니다.

이 대마도도 일본에 뺏겼습니다. 그건 나중에 시간 있으면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매결연 취소하기를 바랍니다.

거기 시마네현에서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는 관광여행을 많이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얻은 것이 뭐 있느냐, 그 섬나라 근성 그 왜놈의 근성은 고치지를 못합니다. 개꼬리 백년 물어봐도 개꼬리 되지 족제비 꼬리 안 됩니다. 그건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그러나 본의원은 사건이지만 과감하게 시마네현하고 자매결연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제 그 나라하고 자매결연 안 해도 우리는 살수가 있습니다.

대마도도 고구려 때부터 고려 우왕 3년, 세종 원년, 고종 9년까지 우리가 대마도를 관리했습니다. 1876년 강화도조약에 의해서 일본의 메이지정부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뒤에 이승만 박사가 1948년, 1949년 기자회견을 해서 영유권의 주장했지만 경제가 무엇인지 힘의 논리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대마도는 부산에서 보면 보입니다. 광안리에서 보면 보이는 대마도는 우리 거라고 소리 한마디 못하고 200해리 밖에 있는 일본은 보이지도 않는 독도를 자기 나라라고 주장하니 중앙정부나 IMF 와 가지고 일본에서 무슨 썸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가 된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에 지탄을 받드시 받을 날이 닥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 경상북도 예산 중에서 문화재 보수예산 1.7%, 2003년도 문화재 예산보수비 1.6%, 2004년도 지금 1.4%, 전국의 문화재가 경북에 20%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비도 김대중대통령 시절부터 전체예산의 2%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문화의 보고인 경북의 문화재 보수비가 2%도 상회하지 못하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늦게라도 터득이 되었으면 차기에산부터 3%정도는 문화재 보수비를 올려야 합니다. 길 잘 닦았다고 길 구경하러 갑니까? 빌딩 높으면 잘 지었다고 빌딩 구경하러 갑니까?

조상이 남겨놓은 문화재가 잘 보관하고 있는지 미국 같은 데는 인디언이 창을 던지고 활을 던지는 그 바위 하나를 문화재로 곱게 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관광객을 받는데 우리는 그 많은 역사속에 얼마나 문화재가 많습니까? 현재 1,575점입니까? 전국의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국립박물관에 가 있는지 직지심경이란 책이 있습니다. “백운화상 초록불도 직심체요절” 하는 직지심경 하권 하나를 블란서국립박물관에 빼앗겼습니다. 도난 당했습니다. 이것이 구텐베르크 금속활자보다도 백년 가까이 앞선 건데 두 권 중에서 하권을 빼앗겼습니다.

이 책을 만들어 낸 데가 충청도입니다. 충청도에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고려 우왕 3년에 청주목·홍덕사라는 절에서 이 직지심경을 간행했는데 충청도에서는 조그마한 청주에서는 직지심경을 찾아오기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그 자리에다가 인쇄박물관까지 세워 가지고 유네스코에 등록되어서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책을 우리 청주에서 만들었다. 청주입니다. 청주에서 만들었다. 자존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삼국유사 경북에서 스님이 만들었지요, 삼국사기 김부식이 경북 여기 영천, 경산 어른이지요. 그것뿐입니까? 국보 70호인 훈민정음이 안동에서 나왔습니다. 강 송선생이 훈민정음을 일제시대 때 파수원을 팔아 가지고 3,000원을 주고 상인한테 샀습니다. 일본 놈 몰래 경찰들 몰래 빼 가지고 서울에 가져 왔는데 그것이 국보 70호인데 딱 우리나라에 훈민정음 그것 한 권뿐입니다.

아니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하셨는데 훈민정음 하나 대한민국에 없다면 우사 아닙니까? 이것도 안동에서 나왔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용비어천가가 봉화에서 나왔습니다. 서울박물관이 용비어천가 때문에 서울시립박물관이 자랑을 합니다. 우리 용비어천가 가지고 있다고. 이것도 경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봉화에서 나왔는 책입니다.

그럼 우리 경북에는 이런 소중한 책이 있는데 고서, 고문서 수집하라고 제작년에 6대 때 돈2억 줬더니 국학진흥원에서 반틈은 신간서적 사버리고 반틈은 고서 사버리고 업자 농간에 의해서 .

안 듣는 거라, 집행부가 안 들어요. 그저 경주문화엑스포 노래하고 영화 틀고 찍고 쫓고 채육하는 데는 물 쓰듯이 쓰면서 왜 조상이 남겨놓은 문화유산에 그렇게 무관심합니까?

우리 문화는 동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동적인 문화는 체전, 노래, 미술, 시화 이것은 아무나 돈만 있으면서 합니다. 그러나 정적인 문화는 조상이 남겨놓은 문화, 용비어천가 경북에 있습니까? 훈민정음 경북에 있습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 우리 경북에 있습니까? 국학진흥원에 가 보세요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십니까?

경북의 지사이하 공무원은 그저 주민의 눈에 보이는 데만 이렇게 생색을 내지 안 보이는 쪽의 조상의 숨결을 섬기는데는 등한시한 겁니다.

지사님께서서는 경상북도 문화재의 보수를 위해서 1.7% 미만인 것을 몇 % 까지 예산을 상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 저는 보충질문 시간이 있으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대진 의원(행정사회위원회)

먼저 도청이전과 시·도통합 문제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81년 대구시의 직할시 승격으로 시·도가 분리된 이후 경북도청의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92년7월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 '95년3월 도청이전후보지 선정에 관한 결의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결, '96년 5월 21세기 경북발전위원회 행정·문화 분과위원회의 도청이전에 관한 의견수렴, '97년 3월, 도청이전실무기획단 구성, '97년 6월, 도청이전추진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99년 11월 도청소재지선정추진위원회조례안 제출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의 유보결정등 도청이전에 대하여 의회 및 집행부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와 활동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지난 '99년, 전남도청의 이전지가 무안으로 결정됨으로써 우리 도에서도 각 지역별로 도청 유치운동이 과열경쟁을 보인 바 있으며, 급기야 2000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도청이전의 중단이 제기된 적이 있고, 이어 각종 시민단체에 의한 시·도 통합운동 등 시·도 통합론과 맞물려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같이 도청이전 문제가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최근 경상북도는 해체되어야 할 도라며 시·도 통합에 대한 조해녕 대구시장의 불가 견해는 우리 경북 자신에게 그 동안 잠복되어 왔던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 재정리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도청이전 문제는 단순히 소재지 선정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 및 민원수요에 대한 효율화와 능률화, 지역경제 역량의 결집, 그리고 지방경쟁력 강화를 통한 종합적·체계적 발전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도 23개 시·군 전체의 지역 균형발전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의 도청이전에 관한 향후계획은 첫째, 장기적, 거시적 안목에서 접근한다는 자세이며, 둘째, 시·도 통합 논의를 비롯한 행정수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방행정 계층구조 개

편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는 내용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본 의원은 우리 도의 도청이전 추진방향이 시·도 통합, 행정수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방행정 계층구조 개편 등이 고려사항은 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별개의 사안이며, 그 제1전제는 지방자치 실시의 근본목적인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데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도청이전은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과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리고 도청이전은 지사의 선거공약으로 아직도 공약으로서 유효한 것인지, 만약 공약으로서 유효하다면 임기 내에 어떤 이전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천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울러 도청이전 시, 인구 20만명 기준으로 할 때 그 기반건설 비용이 약 2~3조원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도권의 과포화·과집중에 따른 폐해해소와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취지와 명분 하의 행정수도 이전은 사실 지난 제16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선거 최대쟁점이었으며, 참여정부 출범이후 작년 12월 29일, 분권3대 특별법 중 하나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금년 4월17일 동법시행령이 발효됨으로써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되었고, 지난 21일, 이 사업을 추진할 전담기구인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발족됨으로써 본격적인 이전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행정수도는 2030년까지 국비 11조3,000억원, 민간부담 34조4,000억원 등 총 45조6,000억원을 투입하여 2,300만평 규모에 인구 5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장기적 효과로는 수도권 인구는 약 51만3,000명이

감소하고, 충청권의 인구는 약 65만1,000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도시건설이 완료되는 2030년도까지 신규고용창출 효과는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방향을 보면, 다극분산형 국가구조에 적합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며, 특히 충청권의 신행정수도에 접하고 있는 경북 북부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린 개발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발전전략 및 개발전략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은 지난 주 출범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추진지원단으로부터 신행정수도 건설 가능지로 조사된 충청권 10여곳에 대한 현황 및 기초조사 결과보고를 받은 뒤, 오는 6월말에서 7월초에 복수후보지를 선정하고 금년 하반기 전국 순회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수렴을 한 뒤 한 곳을 최종 확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도시설계를 위한 국제현상공모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지역에서 순회공청회가 개최될 시 우리는 어떤 제안을 하고자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과거 제3공화국 시절 남북의 극한적 냉전상황 하에서 수도이전을 사실상 계획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난제로 보류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그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이 함께 시행될 경우에 서울의 인구는 약 170만명까지 감소를 하고 연간 1조1,000억원의 교통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발표하고 있으나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의 인구는 절대로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오히려 충청권과 인접하고 있는 경북 북부지역의 인구가 충청권으로의 유출로 인해서 북부권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동의를 하시는지 그 견해와 인구감소 방지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본 의원은 앞으로 신행정수도 이전이 한 세대 이상 걸쳐서 추진될 행정수도 이전은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긍정적인 측면은 행정수도 이전이 원칙적으로 지방분권과 맥락을 같이 하여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가적 과포화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며, 부정적인 측면은 행정기능의 수도로만 한정할 경우 경제력의 집중현상과 그에 수반되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없으며, 지방간 역차별 현상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본 의원은 행정수도의 이전보다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로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방분권 취지에 적절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한 예를 들겠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정치수도는 베를린입니다. 행정수도는 본입니다. 경제수도는 뮌헨입니다. 언론기능은 함부르크입니다. 권역별 기능을 성공적으로 잘 분산을 시켰고, 우리에게도 지금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만약에 난항에 부딪칠 경우에 그 대안으로 수도 서울은 그대로 두면서 부산은 예를 들어 해양수산부, 대구는 산업자원부, 경북은 농림부 또는 문화관광부, 대전은 정보통신부 등을 분산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이를 순회공청회 시에 지사님께서도 제의할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 경상북도산하 지방공기업 및 법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도는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 등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공기업법, 민법, 특례법, 조례 등에 근거를 해서 경북개발공사, 3개 도립의료원, 경북통상,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북테크노파크, 한국국학진흥원,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문화엑스포, 경상북도청소년수련관, 경북장학회 등 각종 지방공기업 및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산하 지방공기업 및 법인에 대한 연간 사업추진 및 운영성과 평가기준과 예산투입 대비 산출의 경영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 산하에 지방공기업 및 법인체의 인사문제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후에도 정부는 퇴직공직자가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낙하산 인사를 개혁적인 차원에서 시정하겠다고 공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의 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법인체는 아직 시정이 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도 고위공직자 출신이 대표자로 임명이 되는 등 전형적인 낙하산식 안식처 인사를 답습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의 정년을 연장해 주는 결과를 초래해서 조직 내에 구성원간의 갈등과 사기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조직의 전문성과 적재적소의 인사원칙을 무시한 전관예우 성격의 무원칙 파행 인사관행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는데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이러한 인사관행에 대한 시정대안으로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적법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로서 도내에 거주하는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가칭 경상북도산하 공기업 및 법인체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제의하고자 하는데 이를 수용하실 의사는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도립경도대학 정상화 및 발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95년2월 우리 도의회의 전문대학설립동의안 의결과 '96년12월 교육부의 설립인가로 개교한 도립경도대학은 개교당시에 5개학과 360명의 정원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98년12월 예천전문대학에서 경도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는 등 외형상의 변화된 모습을 갖추고 현재는 주간 5개과 3계열 1,280명, 야간 1개과 1계열 160명 등 5개과 3계열 1,440명 정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상의 팽창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설립취지에 역행하는 파행운영과 학사의 난맥상을 노출시켰습니다. 대학과 대학구성원 모두가 지역사회와 여론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고 학교명예를 크게 실추시키는 부끄러운 경험도 우리는 겪었습니다. 이는 향후 학교운영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속적인 혁신만이 학교존립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의원은 경도대학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학정상화와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경도대학의 5개과 3계열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과들이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 및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위주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는 듯 하나 아직 컴퓨터정보학과, 인터넷정보통신계열 등 유사학과가 병립이 되어 있어서 구조조정의 여지를 실제적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현실적 추세가 유사학과들을 통폐합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경도대학의 경우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대학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보고 이에 부합하는 대책으로 바이오산업육성에 필요한 농생명학과나 농화학과, FTA를 대비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농경제, 농경영학과 등 농업관련 학과나 양궁학과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학과를 신설·재편합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본 의원이 제기한 학과를 신설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05년도 학과계열 및 학생정원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도 함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 신입생지원 및 등록현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모집정원 720명에 3,212명이 지원해서 4.5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547명이 등록을 해서 등록율 76%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2003년도에는 모집정원 720명에 3,247명이 지원해서 역시 4.5 대 1의 높은 경쟁률에 381명이 등록을 해서 53%의 다소 낮은 등록율을 기록하였습니다. 금년 2004년도에는 정원 720명에 698명이 지원을 해서 0.97 대 1의 경쟁률에 262명이 등록을 해서 36%라는 최악의 등록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의 등록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신입생 유치방안과 등록율 증대방안에 대해서도 지사님께서 소신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 교육청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0교시 폐지에 대한 도 교육청의 견해 및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 교육청과 전교조의 합의에 따라 그동안 시행해 오던 0교시를 폐지하고 보충·야간자율학습도 학생선택에 맡기기로 하여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 사이에 논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논쟁의 핵심적 내용을 보면 전교조 측은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존중하고 학교의 학원화를 막아서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주장, 학부모 측은 ‘학교에서 학습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결국은 학생들이 학원이나 과외수업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서 학교교육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찬반양론에 대해서 도 교육청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 교육청과 전교조의 합의과정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은 이 제도 시행이 공교육 정상화란 기대 이면에 학원 열풍이 일어나 교육여건의 차이로 인한 교육불평등 심화현상이 심히 우려되는데 향후 0교시를 폐지하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도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 교육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난제처럼 얽힌 교육문제의 현명한 해법이야말로 지역사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농촌지역 교육의 성공은 바로 그 해당 지역의 성공입니다. 농촌교육의 실패는 그 지역의 실패로 바로 연결된다고 단증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농촌지역 교육문제를 관찰해 보면 농촌지역 주민들이 자

녀교육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도시로 위장전입, 대도시로 이주로 인해서 학생수가 감소하고 이어서 학교 통폐합, 폐교가 하루하루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농촌지역 근무기피 등 비교육적인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여 농촌지역 교육 붕괴현상이 날로 심각하여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지역의 교육이 날로 붕괴되어 가고 있는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적절한 대책은 무엇인지,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의원은 농촌지역 교육문제의 해결 대안책으로 학교 교육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을 하고 농촌지역 근무교사의 근무여건을 확실하게 개선시켜 주고 근무하는 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모든 정책적 배려가 농촌지역 우선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기 경북교육계획 경북교육 2006의 5대 역점사업 중 하나인 농어촌교육 활성화대책에서 교육 여건개선 시범학교 운영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이 사업의 파급효과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하 의원(교육환경위원회)

존경하는 정무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의근 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지역구인 경산에서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경산·청도·대구 통합이라는 선거공약을 놓고 과연 바람직한 공약인가? 가능성은 있는가? 라는 논란을 벌인 바 있습니다.

또 지난 4월 26일에는 조해녕 대구시장이 시·도 통합은 논의할 가치도 의미도 없다고 하면서 경상북도는 해체되어야 할 도라도 주장해서 논란을 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시·도를 통합한다는 것은 도청의 위치를 대구에 그대로 두는 것이고 도청을 이전하면 시·도 통합은 포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며, 이의근 지사마저도 시·도 통합 논의를 위해 도청이전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의근 지사께서는 지난 2001년5월28일 한나라당 시·도지사 정책간담회에서 "도청이전 전에 시·도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대구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도청 이전 후에 통합할 경우에는 2조~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대구에 대한 집중력은 분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사의 발언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지사 또한 시·도를 통합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도청을 대구에 그대로 둔다는 것은 대구 집중을 의미하고 도청을 이전한다는 것은 분산을 의미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지금 행정수도는 물론 268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권 집중현상으로부터 지방을 균형 발전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이제 지역 내에서의 특정 지역, 대구집중이 과연 바람직한가? 지역 내 균형발전과 지방자립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도 고민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300만 도민은 우리 의회는 물론 이의근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지역 내 균형발전에 대한 솔직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중이 아니라 분산이라는 시대정신에 충실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지방자립화를 연구보고서를 보면 전국을 28개 기초경제권, 5대 광역경제권, 3대 초광역 경제권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경북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대구, 구미, 포항, 안동, 문경으로 5개 기초경제권을 나누고 있으며, 이중 경산, 청도, 성주, 고령, 영천, 군위 등 6개 시·군을 대구경제권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상당부분 국가정책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시·도 통합의 필요성이 역사적, 정서적 동질성에서 경제적 목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상황에 비추어 그 내용을 꼼꼼히 따져 대구·경북의 미래를 가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의근 지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경상북도 도지사로서 경산·청도·대구 통합의 공약이 과연 바람직한지, 그리고 그 실현 가능성은 몇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해녕 대구시장의 경상북도는 해체되어야 할 도라고 하는 발언의 근거와 배경이 무엇인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이런 상황에서 시·도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평소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은 시·도를 통합하더라도 경상북도 내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도내 낙후지역으로 도청을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공감하시는지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지방자립화를 위한 단순한 경제권 설정에 그치는지 아니면 행정구역의 개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할 때 지방자립화를 위해서는 시·도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통합한다면 도청을 대구에 그대로 두는 것과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지방자립화를 위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무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물부족 국가입니다. 연간 강수량의 76%가 증·발산되거나 바다로 유입되고 있으며 실제 사용량은 24%에 불과합니다.

지하수 이용량은 연간 수자원 총이용량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용율이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지하수 오염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지하수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폐공 처리율에 있어 2002년말 현재 전국 평균 처리율이 93%인데 반해 경상북도는 2,594개 중에 미처리 건수 869개로 처리율이 64%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2002년과 2003년 태풍과 홍수로 인해 침수된 김천과 영양의 침수공 총 61개 중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밀폐식 상부보호공은 17개 공에 불과해서 나머지 72%인 44개소의 지하수 관정은 오염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함께 관장하는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업무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수질보전과 또는 물 관리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상북도는 중앙의 부처별 기능에 따라 온천업무는 도시계획과, 농어촌용수는 농업기반과, 먹는 물과 간이상수도 및 폐공조치 등은 수질보전과, 지하수개발시공업 등록 및 관리는 치수방재과로 나뉘어져 전담부서는 물론 전담직원조차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선 시·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건환경산림국장께 물겠습니다.

첫째 폐공처리율이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이유와 현재의 폐공처리 현황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난 2003년 1월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부산, 제주, 경기, 강원 등은 이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위한 용역발주 등 계획수립에 착수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수립 당시 우리 경상북도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소개해 주시고 우리 도 역시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

조기에 수립, 수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 묻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지하수관리를 위해 조직을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도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보전부서로 지하수 업무 전체를 관장하도록 조직을 개편 할 의향은 없는지, 지하수 업무를 전담할 전담계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이의근 지사와 도승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2년말 기준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88.7%입니다. 경상북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14위로 73.1%에 불과합니다. 전국 평균을 넘는 곳은 포항 88.8%, 구미 94.3%로 2개 시에 불과하고, 특히 성주는 25.9%로 전국적으로도 가장 상수도 보급률이 낮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3년말 현재 경상북도는 간이상수도 1,959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2,880개소 등 총 4,839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을 48만842명의 도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민방위비상급수시설 182개소,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학교수는 187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조사해 본 바 간이상수도에 대한 최근 3년간 민관합동 수질검사 결과 총 327건 중 147건 45%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도내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한 2003년도 수질검사 결과 또한 비상급수시설을 기준으로 할 때 총 182개소 중 102개소 56%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경우 이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의성,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칠곡, 예천, 울릉 등은 100%이 부적률로 나타났고 포항 55%, 경주 66%, 김천 94%, 경산 60% 등 한마디로 검사 결과를 믿어야 할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식수를 지하수로 이용하는 도내 190여 개 학교에 대한 2003년

도 수질검사 결과 총 187개교 중 58개교 31%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4년 현재 72개교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도 26개교 36.1%의 부적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주요 항목으로는 일반세균군, 대장균군, 질산성질소, 탁도가 대부분을 차지해 관할 행정기관의 관리 소홀이 주된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도민이 먹는 식수에 대한 수질관리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보건환경산림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수질검사의 부적합률은 3년간 평균 부적률이 4.9%에 불과한 반면 민관합동 수질검사의 결과는 부적률 45%에 육박하는 등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질검사 통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수자원파괴, 전쟁 등 유사시 상수도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때 음용수, 생활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먼저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기준은 음용수에 적합해야 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근 지사와 도승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편 1,959개소 간이상수도의 관리 및 시설개선 실태를 살펴보면 자동염소투입기의 설치여부는 전체 1,959개중 28% 인 549개소에 불과합니다. 특히 칠곡의 경우에는 95개소의 간이상수도시설중 염소투입기를 설치한 시설은 단 하나도 없어서 0%입니다. 배수탱크의 개·보수 실적 역시 15.1% 297개소에 불과합니다. 울릉군의 경우 16개 중 15개를 개·보수하여 94%이지만 포항의 경우 3%, 경주 4%, 청도 6% 경산 11% 등 지자체마다 매

우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치된 지 길게는 30년 가까이 된 간이상수도가 배수탱크의 개·보수 한번 없었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사업예산을 살펴보더라도 지난 4년간 도자체 사업예산 7,969억4,900만원중 상수도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75억 4,900만원으로 0.94%에 해당합니다. 시토목사업 5.92%, 도로사업 7.78%, 하천개·보수사업 2.34%, 수리시설사업 3.23%,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43%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간이상수도 개설 및 시설개선사업에 지난 5년간 연평균 도비 4억8,300만원, 자동염소투입기 설치사업에 1억5,000만원을 지원했다면 그야말로 생색내기 사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먹는 물은 국민의 생존권에 해당하며,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가 펼치는 각종 사업 중에서 도민이 먹는 식수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둘째,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라도 우선적으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환경산립국에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개선 및 수질 관리를 위한 예산을 현재의 0.9%가 아니라 5%이상으로 대폭 증액 요구할 경우에 다른 사업과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더라도 이를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승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청은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학교에 대해 연간 4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중 1회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왔습니다. 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2년에는 단 한 건의 부적이 없었으며, 2003년에는 보건소에서 한 8개 항목에 대한 검사는 단 한 건도 없으나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3건의 부적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설명 드린바와 같이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결과는 매우 상이합니다.

첫째, 그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선 시군 보건소에 수질검사 비용으로 나가는 예산의 규모는 연간 어느 정도인지, 도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검사와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의 결과를 편의대로 축소 해석하려는 태도는 도민을 그저 안심시키려는 의도라기보다는 ‘먹는 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수질 상태를 알리고 함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수질검사의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실천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이의근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21일 경상북도는 이미 두 차례나 반려한 바 있는 경산시 남천면 불석광산채광 인가 신청에 대해 협의과정에서 나타난 우려사항과 관련 경산시의 요구 및 지시사항에 대해 이행절차를 완료한 후 작업하라는 조건을 붙여 인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산시와 채광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주민의견을 무시한 책임 전가식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특히 해당지역을 지역구로 가지신 우리 황상조 도의원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건은 과학기술진흥과장 전결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수인 민원으로 과장 전결로 처리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1차, 2차 반려와 달리 3차에서 인가를 결정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1, 2차 반려의 사유와 비교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23조는 ‘다수인 관련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장은 신속·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업무 담당 부서 등으로 하여금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상황을 분석·확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사안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둘째, 주식회사 황해자원으로부터 계획인가 신청을 받았을 당시 신청서

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여 경산시에 공익장해 협의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신청서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경산시로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경산시가 불합리한 부분 외에도 진입도로에 대한 도로상의 상세 계획도면과 도로유지 관리, 통행안전 및 민원예방 대책이 인가전에 강구되어야 하므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검토 결과를 제출했음에도 신청서에 불합리한 부분만 수정·보완하여 인가를 통지했습니다.

행정자치부 발행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하면 민원접수시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즉시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즉시 보완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민원서류를 이송시 미비서류에 대한 보완 요구사실을 함께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 보완요구 처리 주무부서에서는 관계기관의 보완요구서류를 종합적으로 제출받아 일괄하여 요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기준에 위배됨은 없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채광계획의 신청을 받은 기관은 경상북도이며, 인가권 역시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황해자원은 인가서를 경상북도로부터 수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는 몇 가지 조건을 걸어 인가서를 경산시로 보냈습니다.

이러한 인가서를 경상북도가 황해자원에 직접 전달하지 않고 경산시를 경유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다시 경산시로부터 인가서를 되돌려 받아 직접 처리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모골 채광인가와 관련 주식회사 황해자원은 채광반대 주민대표에게 서신을 보내어 자신들은 완벽한 인가서를 받았다, 법률에 조건부인가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해자원의 주장이 맞는지, 경산시와 주민들이 알고 있는 소위 정지조건부 인가인지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보충질의를 통해 재차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도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Ⅶ. 5분 자유발언

□ 제3차 본회의

임원식 의원(산업관광위원회)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해안 울진지역의 지진발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29일 울진 해안 80km지점에서 국내 계기지진 관측이래 최고인 5.2리히터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6월1일까지 세 차례의 여진이 발생하여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인 동해안,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안전을 중요시하는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에 강진이 발생하였음에도 진상규명이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중앙정부나 경상북도의 안전불감증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코자 합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원자력 발전소가 집단 건설되어 현재 14기가 가동 중에 있으며, 경주 월성에 2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포항에는 국내 최대 철강산업체인 포항제철소가 있습니다.

지진은 예보가 없다고 했습니다. 네 차례의 지진발생은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고, 지진발생을 예보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지진으로 울진, 경주, 고리 원전이 활성단층 내에 있는 것으로 입증되어 지역주민, 환경단체, 국민전체가 원전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재앙으로 기록된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도 경미한 지진에서 비롯되었다는 정설을 정부나 한수원은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진 발생으로 인한 문제는 동해안 경북의 문제만은 아니며, 한반도의 생

사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의근 지사께서는 경북도 차원에서 전문가들로 대책팀을 구성하여 지진 발생에 대한 조사와 안전진단을 하여 도민들에게 밝혀줄 것을 촉구하며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범 정부차원의 진상규명과 지진발생에 따른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 여부 등을 조속히 해당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강력히 촉구를 바랍니다.

또한 경북도의회에서도 중앙정부에 지진발생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는 결의를 보여줄 것을 간곡히 제안 드립니다.

다음은 경북도정의 조직기능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의근 지사께서는 경제제일도정, 기업유치활동, 또 경북의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고생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많은 어떤 큰 프로젝트 이런 사업보다도 제일먼저 경상북도의 조직기능을 아마 제일먼저 좀 점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정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도민들이 많은 피해를 봅니다.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감사기능이 마비되었다, 시·군에서 감사를 받지 않겠다, 거부운동...

그래서 저는 경상북도에 감사관실이 존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히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1월 달 유교문화사업단이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아마 지적을 받았을 겁니다. 북부지역 11개 군에서 몇 개 군에 아마 지적을 받았는데, 예산을 전용했던 문제, 아마 그 사업을 3년 내지 4년 간 지연시켜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 “경북도의 감사관실로부터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하니깐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유교문화사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경상북도에 감사관실이 있으면서도 잘못된 부분을 중앙부처

의 감사원 감사를 받고 지적 받도록 그 동안 뭘 했느냐 이 말입니다.

결국은 경상북도에서 감사관 역할이 중요합니다.

감사가 꼭 어디 감사를 해서 누구를 처벌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회수해서 조기에 또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도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감사관 뿐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 기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동맥경화증 초기에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원 기능이, 시스템이 잘 작동되어야 경상북도 기능 자체가 자정역할을 해서 상당히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지금 경상북도 간부직원, 특히 시·군부단체장 포함해서 수 십 명이 아마 2년 후에 지방선거에 출마할 뜻이 있다고 여론이 지금 비등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의근 지사께서 9년 간 재직하고 이제 남은 2년, 진짜 경북도정을 위해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될 이 중요한 2년 간 이 시점에, 손발이 말을 안 듣고 시스템이 고장나서 작동이 안 됐을 때, 결국은 고스란히 피해는 도민들한테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조기에 경상북도 조직기능을 철저히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고 고쳐서라도 앞으로 도민들한테 높은 행정서비스, 질 높은 행정이 서비스 되도록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참작해서 앞으로 집행부 이의근 지사께서는 철저히 점검해서 다시 한번 2년 간 새롭게 출발해서 그 동안 계획 세웠던 크고 작은 사업들이 착착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보니까 지사님께서 안 계시네요? 상당히 줌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해련 의원(산업관광위원회)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최근 국내외로부터 대규모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반갑고도 기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4일에는 현대중공업과 경북도, 포항시간의 투자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그 이후 대림산업을 주간사로 하는 민자사업자를 최종 확인하는 등 포항 영일만 신항 컨테이너부두 건설공사가 본격화됨으로써 지역경제 회생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맞물려 2008년경에 경주를 지나는 고속철도의 완전한 개통과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가 2004년 말 개통된다면 본격적인 환동해권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환동해권시대를 맞이함에 있어 그에 따른 일부 중소도시 지역의 소외와 그늘을 살펴보고 그를 해소하여야만 300만 도민의 진정한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몇 가지 사안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속철도 및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등의 개통으로 인하여 고속철도와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가 지나는 주요지역은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인프라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구미~대구~경주·포항을 연결하는 대단위 산업벨트는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구미~대구~경주·포항의 중간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영천과 같은 중소도시의 경우 오히려 발전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교통요충지로서의 인프라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예부터 영천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역할을 전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천은 지리적으로 안동, 영주, 영양, 청송 등으로 경북내륙지방과 대구, 포항, 부산 등 대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경상도 남단 상거래의 중심지여서 농축산물에 대한 물류기능 면에서도 중요하게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천을 그 역할을 전연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저 지나가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물론 미래 물류중심지로서의 기존시설과 도로망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영천을 비롯하여 소도시 및 군지역은 고립무원의 섬과 같이 교통통과지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동해안지역을 중점 개발하는 U자형 국토개발과 영일만 신항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나아가서 지역균형개발을 달성할 수 있으려면 기존 교통 및 물류요충지로서 영천의 교통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경부고속철도와 대구~포항간 고속도로와 연계된 광역교통망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바 이의 적극적인 대책실현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그를 바탕으로 지리적 접근성 강화라는 입지적 우위성을 바탕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중앙정부의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유치하여 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천에서 대구로 진입하는 도로교통시설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도심연계교통망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해 7월부터 대구 동구의 반야월, 안심지역에는 5천300여 가구가 입주하는 동호택지지구가 조성이 되었지만 그에 따른 도로신설이나 확장

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영천에서 대구도심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부재는 곧 영천을 비롯하여 지역 주민에게 고통을 안겨다 준 것은 물론 기본적인 삶의 질마저 낮추어 가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2007년까지 최소한 1만여 가구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동호와 울하지구에 입주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대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종전에 금호강변도로가 검토된 바 있으나 아무런 결론도 맺지 못한 채 백지화되다시피 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영천과 대구간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금호강변도로 신설에 따른 논의결과들을 공개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금호강변도로는 신호등, 교차로 등에 의한 병목현상을 줄일 수 있으며 농지잠식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더욱이 전철, 지하철에 비하면 사업비가 적어 비용 편익상으로도 사업의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단순히 골치아픈 문제로만 여기지 마시고 대구시 및 경상북도의 장기발전계획을 상호 연계하여 대구시의 책임있는 인사는 물론 실무담당자와도 머리를 맞대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되겠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금호강변도로가 불가능해진다면 경북도와 대구시의 교통담당자가 합심하여 획기적인 교통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채희영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근 지사님과 도승희 교육감님.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위원이 5분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울릉도 천부초등학교 학생과 인솔교사 등 25명이 3박4일 일정으로 육지체험학습에 나섰다는 일간지 기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5, 6학년생 20명과 교사 5명으로 체험단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인솔교사는 학생 대부분이 육지체험이 처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과 도승희 교육감님,

울릉도가 진정 경상북도의 땅으로서 행정구역으로 설치된 지 그 얼마이며 울릉도가 경북도에 기여하는 바는 무엇인지 본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울릉도는 육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경상북도의 유일한 도서지방으로서 국토의 최동단 독도를 관할하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우산국의 역사를 간직한 땅입니다.

그리고 울릉도 주민들의 한해동안 육지와의 이동 수를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말 기준 여객선이용 총수 19만1,780명 중 울릉도 주민 2만2,216명으로 11.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민 1인당 연간 여객선이용 운임부담은 18만9,000원으로서 울릉군민의 지방세 담세율 16만2,000원에 비하여 2만7,000원을 초과하였습니다.

실제 포항과 울릉도의 거리는 217km로서 왕복 여객운임은 우등실이 11만900원, 1등실이 10만700원입니다. 또한 울릉도 주민은 선박회사측에서 21.9%를 할인하여 줌으로서 1등실기준 7만8,65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운임수준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432km의 고속철 4만5,000원, 새마을 3만6,800원, 무궁화 2만4,800원에 비교하면 새마을 운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2004년5월30일 기준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은 7만여명으로서 작년대비 7.9%가 증가하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증가하리라고 본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시간 현재까지 울릉군은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원혜택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의원은 이제 울릉도 거주민 여객운임 도비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지사께 권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대명천지 최고가치의 문명사회에 살면서도 5, 6학년 학생들이 육지체험이 처음이라니 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본의원의 머릿속에서는 아프리카대륙의 정글속 주민들이 뗏목이나 카누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과 생활상이 연상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울릉도 주민들의 이동권이 쉽게 보장됨으로서 인구증가는 물론이고 경제적 부담이 이동권으로 인해 가중되지 않을 때 울릉도에 안주하게 되고 지역 발전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미 인천광역시는 서해 5도 주민에게 여객운임을 보전함으로서 함께 하는 복지를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균형발전과 복리증진, 그리고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 도비보전을 적극 권고드리면서 이의 실현은 울릉도민에게 삶의 질 향상과 경북도민으로서 자긍심을 크게 심어주는 첩경이 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현명하신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의 결단을 촉구하고 울릉도민의 숙원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성하 의원(교육환경위원회)

존경하는 최원병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예결위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지는 예산 전반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저 제가 소속된 상임위의 예산 정도는 조금 알고 있을 겁니다.

어저께 저희들 의정연구회 모임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과 의견을 주고받다가 헌정회 관련해서 예산 8,000만원이 우리 예결위를 통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집에 큰 아이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한테 “아빠,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도둑놈인데 그런 소리 들으면서 왜 정치를 하느냐?” 사실 설득할 실력도 없었고 그저 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겠지 라는 정도로 그냥 지나쳤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이 대한민국헌정회가 과연 우리 경상북도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단체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새벽 한 2시쯤 들어갔는데 그 밤에 들어가서 인터넷 들어가니까 이런 법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1991년5월31일 법률 제4,386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제1조에 보면 이 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를 보호·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3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국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4조에 보면 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는 1991년 제정되어서 지금 2004년 23년간 유지되고 있는 이 법률이 23년이 지나서 왜 경상북도의회에 그 법률의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의구심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의회에서 다룰 안건 중에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저희 경북도의원들 별정직 5급보좌관 신설조항과 관련해서 과연 국회의원의 특권이,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특권 1호가 뭐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1호는 연로한 회원 지원금이랍니다. “연로회원지원금”!

우리 헌정회에 소속하신 65세이상 의원님들은 월 100만원씩 지원금을 받습니다. 2001년도까지는 월35만원에서 한 40만원 받았는데 그걸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와서는 너무 짧게, 단 하루만 해도 지원금을 주니까 이제 한 1년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자체적으로 무슨 규정을 새로 만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우리 헌정회가 국회의원의 경로당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원로를 예우하고 전통의 경로효친 사상을 생각해서라도 지원해야 마땅하겠지만 연금을 평소에 한푼도 내지 않고 월 100만원의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그 정도의 품위를 가지고 있고 그 정도의 예우를 받고 있다면 사무실 정도는 자체 거출을 해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 역시 의정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의원 출신 선배의원님들의 모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속한 경산시에서 경산시 출신 도의원들 몇 분 모여서 사무실 내주고 지원비 달라고 하면 아마 경산시민이 웃을 것이고 누구도 그것을 타당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헌정회에 대한 예산안들이 해당 상임위, 예결위를 거치면서 동료·선배의원님들 참으로 고뇌하시고 어렵게 내린 결정임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원칙은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안건 토론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동료·선배의원님들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만큼은 다시 한 번 본회의 석상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5급 의원보좌관 신설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실효성, 예를 들어서 해본들 또 재의가 요청될 것이고 그런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밟아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라는 논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당하게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들을 제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과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발휘할 권한들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당당하고 마땅히 요구해야 될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도 우리 동료·선배의원님들께서 오늘 이 안건처리에 모두의 의지를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 조 례 안 : 6건
- 예 산 안 : 2건
- 동 의 안 : 2건
- 기 타 안 : 3건

□ 조 례 안 : 6건

-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현준 의원의 51인 발의)
- 경상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4. 6. 10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①도지사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6월이상 1년미만	6일
1년이상 2년미만	9일
2년이상 3년미만	12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6년이상	21일

제23조의 【별표3】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7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 및 배우자의 중조부모·조부모·외중조부모·외조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중조부모·조부모·외중조부모·외조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p>제3조의2(비밀엄수)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p>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1일부터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p> <p>②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p>	<p>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p> <p>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p> <p>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p>	<p>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①도지사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p> <p>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p>																																				
<p>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p>	<p>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재직기간</th> <th>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td>3월이상 6월미만</td><td>4일</td></tr> <tr><td>6월이상 1년미만</td><td>7일</td></tr> <tr><td>1년이상 2년미만</td><td>10일</td></tr> <tr><td>2년이상 3년미만</td><td>13일</td></tr> <tr><td>3년이상 4년미만</td><td>16일</td></tr> <tr><td>4년이상 5년미만</td><td>19일</td></tr> <tr><td>5년이상 6년미만</td><td>22일</td></tr> <tr><td>6년이상</td><td>23일</td></tr> </tbody> </table>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일	6월이상 1년미만	7일	1년이상 2년미만	10일	2년이상 3년미만	13일	3년이상 4년미만	16일	4년이상 5년미만	19일	5년이상 6년미만	22일	6년이상	23일	<table border="1"> <thead> <tr> <th>재직기간</th> <th>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td>3월이상 6월미만</td><td>3일</td></tr> <tr><td>6월이상 1년미만</td><td>6일</td></tr> <tr><td>1년이상 2년미만</td><td>9일</td></tr> <tr><td>2년이상 3년미만</td><td>12일</td></tr> <tr><td>3년이상 4년미만</td><td>14일</td></tr> <tr><td>4년이상 5년미만</td><td>17일</td></tr> <tr><td>5년이상 6년미만</td><td>20일</td></tr> <tr><td>6년이상</td><td>21일</td></tr> </tbody> </table>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6월이상 1년미만	6일	1년이상 2년미만	9일	2년이상 3년미만	12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6년이상	21일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일																																				
6월이상 1년미만	7일																																				
1년이상 2년미만	10일																																				
2년이상 3년미만	13일																																				
3년이상 4년미만	16일																																				
4년이상 5년미만	19일																																				
5년이상 6년미만	22일																																				
6년이상	23일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6월이상 1년미만	6일																																				
1년이상 2년미만	9일																																				
2년이상 3년미만	12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6년이상	21일																																				
<p>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 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제23조(특별휴가) ① _____ _____ 【별표3】 _____ _____</p>																																				

현 행

개 정 안

【별표3】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7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산	배우자	1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3】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7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4. 6. 10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기획관리실)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혁신·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업무추진 총괄·조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기획관리실)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15.(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u><신 설></u></p>	<p>제6조(기획관리실).....</p> <p>.....</p> <p>1.~15.(현행과 같음)</p> <p><u>16. 혁신·지방분권 및 균형발전</u> <u>업무추진 총괄·조정</u></p>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4. 6. 10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본문 중 “3,796명”을 “3,810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736명”을 ”1,750명”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집행기관의 정원중 11명(혁신분권담당관실 운영인력)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3,796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736명</u></p> <p>2. ~4.(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p> <p>.....<u>3,810명</u>.....</p> <p>.....</p> <p>1..... : <u>1,750명</u></p> <p>2. ~4.(현행과 같음)</p>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4. 6. 10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소액 부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점용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 달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 정 내 용

개 정 안	수 정 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 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조의3(소액 부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p>제4조의2(점용료의 감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 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 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 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 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 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 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 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 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4. 6. 10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본문중 3,810명을 3,867명으로 하며, 제4호중 91명을 148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총수)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3,810명</u>으로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의회사무기구의정원 : <u>91명</u></p>	<p>제2조(정원의총수)</p> <p>..... <u>3,867명</u></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148명</u></p>

수 정 내 용

당 초 안	수 정 안	비 고
제2조 【정원의 총수】 본문중 3,796명을 3,853명으로 하며, 제4호중 91명을 148명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본문중 3,810명을 3,867명으로 하며, 제4호중 91명을 148명으로 한다.	

경상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4. 6. 10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를 “ 비서관, 비서, 의원보좌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로 한다.

제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의 지방5급 상당 별정직 의원보좌관을 임면할 때에는 경상북도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임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예 산 안 : 2건

- 200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00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경상북도의회 의결내역)

□ 세입예산 - 2,862,149,605천원

- 일반회계(2,314,800,000천원) : 수정없음
- 특별회계(547,349,605천원) : 수정없음

□ 세출예산 - 2,862,149,605천원

- 일반회계(2,314,800,000천원) : 수정있음
※ 붙임 수정내역 참조
- 특별회계(547,349,605천원) : 수정없음

2004년도 경상북도 제1회추경예산안 수정내역

【삭감조서】

(단위:천원)

쪽수	소관부서	내 용	예산수정내역		
			당 초	수 정	증 감
	합 계				△765,000 -
35	기획관리실	헌정회경북지회창립지원	80,000	0	△80,000
67	자치행정국	지방자치경영대전참가	100,000	0	△100,000
346	문화체육 관광국	청도용암은천관광지조성사업	510,000	300,000	△210,000
346	"	의성탑산은천관광지조성사업	450,000	300,000	△150,000
107	사회복지 여성국	안동독립기념관건립	225,000	0	△225,000

【증액조서】

(단위:천원)

쪽수	소관부서	내 용	예산수정내역		
			당 초	수 정	증 감
42	기 획 관 리 실	예 비 비	16,013,198	16,778,198	765,000

【부기조정】

(단위:천원)

쪽수	소관부서	내 용	예산액	비 고
313	경제통상실	외국인투자기업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지원(과목경정) → 국내외투자기업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지원(과목경정)	180,000	

【과목조정】

(단위:천원)

쪽수	소관부서	내 용	예산액	비 고
65	자치행정국	정부혁신국제박람회행사비 (목변경 : 201-01 → 201-02)	30,000	
196	보건환경 산 립 국	천연가스보급 (항변경 : 5311 → 5211)	2,260	

200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경상북도의회 의결내역)

□ 세입예산

- 예산액 : 2,009,159,000천원
- 수정내역 : 수정없음

□ 세출예산

- 예산액 : 2,009,159,000천원
- 수정내역 : 수정있음

※ 붙인 수정내역 참조

200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내역

【삭감조서】

(단위:천원)

쪽수	소관부서	내 용(부기)	수 정 내 역		
			당 초	수 정	증 감
	합 계				△440,000
469	기획예산과	경상교육지원사업비 (각급기관특별재정수요지원비)	960,000	860,000	△100,000
470	“	투자교육지원사업비 (각급기관특별재정수요지원비)	5,040,000	4,700,000	△340,000

※ 단, 포항 학생종합문화센터 건립위치는 거점도서관으로 활용할 포항 인근 6개 시군(경주, 영천, 군위, 청송, 영덕, 울진)에서 접근이 용이한 포항시부 지역으로 선정할 것을 전제로 함.

【증액조서】

(단위:천원)

쪽수	소관부서	내 용(부기)	수 정 내 역		
			당 초	수 정	증 감
557	기획예산과	예 비 비	5,480,230	5,920,230	440,000

□ 동 의 안 : 2건

- 경주천군동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연장허가동의안
- 2006학년도신설학교부지매입비지방채발행안

경주 천군동 문화엑스포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4. 5.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장을 2000년 6월 23일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공동 취득한 후 2004. 6. 22까지 무상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6호에 의거 경주시 천군동 문화엑스포 행사장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허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
 - 허가기관 : (재)문화엑스포 이사장 이의근
 - 위 치 : 경주시 천군동 115번지 외 16필지
 - 면 적 : 토지 515,878m²(156천평) - 17필지(도지분 1/2)
 - 취 득 : 2000. 6. 23
 - 허가기간 : 2004. 6. 23 ~ 2007. 6. 22(3년간)

○ 무상사용 연장허가의 필요성

-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98년이후 3회째 문화축전을 개최하여 왔으며 특히 2003년 행사를 계기로 문화엑스포가 세계적인 문화올림픽으로의 성장 가능성과 함께 지속적인 개최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고 발전·정착을 위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종합문화파크조성과 차기 행사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서는 문화엑스포부지의 무상사용 허가가 부득이한 실정임

3.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잡종재산의 대부)

②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 5. 생략
6.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7. 생략

[참고사항]

시설현황 및 주요연혁

□ 시설현황

- 부 지 : 28필 162천평
 - 부지매입(2000.6월) : 534억원(도·경주시 공동소유)
- 건 물 : 50동 6천평(전시공연장, 사무실, 매표소, 화장실 등)

□ 주요연혁

- '96. 3. 11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 '96. 6. 18 국무총리실에서 중앙시책사업으로 결정
- '96. 9. 06 행사개최에 따른 보고회 개최
 - 道, 경주시, 외무부, ASEM준비기획단, 민자업체 대표 등
- '96. 9. 17 문화엑스포 준비기획단 구성
- '96. 11. 08 경상북도재단법인문화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 제정
- '96. 12. 30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사업자 등록
- '98. 9 ~ 11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
- 2000. 9 ~ 11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0 개최
- 2001. 3 ~ 10 상시개장
- 2002. 3 ~ 10 상시개장
- 2003. 9 ~ 11 2003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

2006학년도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지방채 발행(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4. 5. .
제 출 자 : 경상북도교육감

I. 제출근거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거 2006학년도 개교예정학교 부지매입비 자원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안)을 제출합니다.

II. 지방채 발행 사유

2006학년도 개교예정학교의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부족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확보하고자 합니다.

III. 발행(안) : 붙임

2006학년도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지방채 발행(안)

I.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

- 2006년도 개교학교에 대한 신설비(부지매입비 및 설계용역비) 부족재원
충당
⇒ 완공 후 개교 준수 및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
- 교육여건개선의 원활한 추진
⇒ 과대학교 분리 및 과밀학급 해소, 택지개발지구의 교육수요 대처

II.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5조(지방채무 및 채권관리)를 준용하는 지방교육자
치에 관한 법률 제4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Ⅲ. 지방채 발행 계획

- 사 업 명 : 2006학년도 개교예정학교 부지매입비
- 발행계획 : 16,771백만원
- 차 입 선 : 금융기관채 증서차입
- 차입조건 : 1년거치 2년분할 상환 (연리 : 4.37%, 변동금리)
- 상환부담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5년 교부금으로 상환
- 차입시기 : 2004년도 하반기

-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입시기 적의조정

※ 지방채 발행 추진 현황

- ◇ 지방채 발행 신청액 : 27,110백만원
- ◇ 지방채 발행 승인액 : 16,771백만원
 - 초등학교 : 8,446백만원
 - 중 학 교 : 8,325백만원
- ◇ 금회 예산반영액 : 19,316백만원
 - 지방채 발행 : 16,771백만원
 - 자체재원 : 2,545백만원
- ◇ 향후 예산반영(예정)액 : 7,794백만원
 - 자체재원 : 금장중, 구평중 부지매입비

※ 2006학년도 학교신설 계획

□ 초등학교

학교명	위 치	완 성 학급수	면 적 (㎡)	비 고
대 이 초	포항시 남구 대잠동 산16-2	36	18,000	
금 장 초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341-4	42	20,000	
구평동부초	구미시 구평동 431-2	46	12,034	
임 은 초	구미시 임은동 302	30	16,224	

□ 중학교

학교명	위 치	완 성 학급수	면 적 (㎡)	비 고
금 장 중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184-1	24	17,714	
광 평 중	구미시 송정동 39-3	36	18,181	
구 평 중	구미시 구평동 474-2	24	12,004	
오 태 중	구미시 오태동 613-2	36	18,181	

□ 기 타 안 : 3건

-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위촉기간연장의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4. 5. .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보 고 사 유

- 지역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기적으로 반영하여 단년도 예산의 제약성을 보완하고 장기 예측적·미래지향적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연동화계획에 의거 수정·보완하여 수립한 「2005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지방재정법 제1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본 안을 제출함

2. 주 요 내 용

- 계획기간 : 2003~2007년(5년간)
- 계획대상 :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 계획범위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투자사업 범위 : 총사업비 20억원이상 단위사업
- 계획의 주요내용
 - 년도별 재정전망분석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년도별, 분야별, 재원별 투자계획 수립
 - 부족재원에 대한 자원조달방안 강구 등

3. 계획수립근거 :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

4. 세부계획내용 : 별도책자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회위촉기간연장의견

의안 번호	
----------	--

제의 년월일 : 2004. 5.

제 의 자 : 경상북도의회의장

1. 주 문

경상북도의 200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경상북도교육청의 200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을 연장한다.

2. 제의사유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②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기간 대비 업무 과다와 토요일무제 등 공휴일이 겹쳐서 검사일정이 부족하고 현장확인을 통한 보다 심도 있는 검사와 개선·발전적인 감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검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함.

3. 제의내용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회위촉기간을 당초 20일간에서 30일간으로 다음과 같이 10일을 더 연장한다.

- 당초 기간 : 2004. 5. 20 ~ 6. 8(20일간)
- 연장 기간 : 2004. 6. 9 ~ 6. 18(10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견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04. 6.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주 문

2004.7.1일부터 7.10일까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한다.

2. 제안이유

-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활동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04.6.30일로 활동기간이 만료됨.
-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함.

3. 내 용

- 현재 활동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4. 7. 1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